

정책연구
2020-14

코로나19 확산과 가계 지출 변화

이승호 ·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승호)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 (이승호)	5
제1절 머리말	5
제2절 문헌검토	7
1. 코로나19 확산의 월별 변화 추이	7
2. 감염병 확산이 가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12
제3절 분석자료와 방법	18
1. 분석자료	18
2. 분석방법	19
제4절 가구 소득과 지출 변화	20
1. 2019~2020년 소득, 지출 변화 추이	20
2. 소득분위별 소득, 지출 변화 비교	26
3. 세부항목별 소득, 지출 변화 비교	29
제5절 요약 및 결론	33
제3장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홍민기) 35
제1절 머리말	35

제2절 자 료	37
제3절 분석 방법과 기초 통계	39
1. 분석 방법	39
2. 추가로 통제집단을 설정할 것인가?	42
3. 다른 정부정책의 영향	48
4. 기초 통계	48
제4절 추정 결과	50
제5절 결과에 대한 해석	59
1. 한계소비 성향	59
2. 가계동향조사에서의 한계소비성향	61
3. 관련 연구	62
제6절 요약 및 결론	63
 제4장 결 론	(이승호) 65
제1절 요 약	65
제2절 정책 제언	67
 참고문헌	69
 [부록] 부표 및 부도	72

표 목 차

<표 2- 1> 연구모형 및 시기 구분	12
<표 2- 2> 2019~2020년 소득, 지출 변화 및 이중차분 결과	21
<표 2- 3> 소득분위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항목 변화율 (모형 1)	29
<표 2- 4> 소득분위별 코로나19 완화와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득항목 변화율(모형 2)	30
<표 3- 1> 1인당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재난지원금	36
<표 3- 2> 국민계정 소비액과 카드지출액	38
<표 3- 3> 시기 구분, 평가 대상, 비교 시기	40
<표 3- 4> 지원금 지급과 지역별 소비지출의 관계: 상황 1	43
<표 3- 5> 지원금 지급과 지역별 소비지출의 관계: 상황 2	43
<표 3- 6> 지원금 지급과 지역별 소비지출의 관계: 상황 1-1	44
<표 3- 7> 지원금 지급과 지역별 소비지출의 관계: 상황 2-1	45
<표 3- 8> 지원금 지급과 업종별 소비지출의 관계	47
<표 3- 9> 시기별 A카드 평균 지출 금액	49
<표 3-10> 추정 결과	51
<표 3-11> 재난지원금의 동태적 효과	51

그림목차

[그림 2-1] 신규 확진자 수 변화 추이	7
[그림 2-2] 2019~2020년의 1~6월 계절조정 고용률 변화 추이	8
[그림 2-3] 2019~2020년 1~2월 가구 지출 구성 비교	22
[그림 2-4] 2019~2020년의 시기별 소득 구성 비교	24
[그림 2-5] 2019~2020년의 시기별 소득 구성 비교	25
[그림 2-6] 소득분위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구 소득, 지출 변화(모형 1)	27
[그림 2-7] 소득분위별 코로나19 완화 및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소득, 지출 변화(모형 2)	28
[그림 2-8] 소득분위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출항목 변화 (모형 1)	31
[그림 2-9] 소득분위별 코로나19 완화와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지출항목 변화(모형 2)	32
[그림 3-1] 총소비와 가계소비에서 카드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	39
[그림 3-2]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	40
[그림 3-3] Kim et al.(2020)의 연구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이중차분으로 추정된 결과	46
[그림 3-4] 2019년과 2020년 A카드 매출액	49
[그림 3-5] 재난지원금의 동태적 효과	52
[그림 3-6] 코로나19(상), 거리두기 완화(중), 긴급재난지원금(하)이 지역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53
[그림 3-7]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율과 소비지출액,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의 관계	54
[그림 3-8]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율과 재난지원금 효과의 관계	55

[그림 3- 9] 코로나19와 거리두기 완화가 업종별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56
[그림 3-10] 거리두기 완화가 업종별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57
[그림 3-11]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58
[그림 3-12] 카드사용액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60

요 약

감염병의 확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면 가구의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지출 규모가 감소한다. 대면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는 매출이 감소하고, 노동 시장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가구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소비 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긴급 보조금을 편성, 지급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가 확산 및 완화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전후 가구의 경제적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정부 보조금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완화 과정 및 정부와 사회의 대응에 기초하여 2020년上半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가구 소득, 지출 변화를 2019년의 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은 가구 소득을 4.4%, 지출을 11.1% 감소시켰다. 감염병의 확산은 소득보다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가구 소득이 8.1%, 지출이 12.4% 증가하였다. 소득과 지출 모두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가구 소득의 감소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관측되었지만, 저소득 가구는 근로소득 감소가, 고소득 가구는 사업소득 감소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1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서 소득 감소보다 지출의 감소가 더 크게 관측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는 소득 변화가 없이도 직접적으로 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가구 소득과 지출이 증가하였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과 지출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편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형식의 보조금 지급은 감염병 확산 시기에 지출 변화가 적었던 1분위 가구에서도 다른 분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카드 지출액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따라 시기를 나누고, 2019년과 2020년 카드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에 소비지출이 16.3% 감소하였다. 이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7.3% 증가하였고, 5월 중순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소비지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급 초기에 높게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2주 지난 5월 5주째에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15.6%까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여 8월 두 번째 주 정도에는 계수값이 0에 가까워졌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증가한 소득의 70~80%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세금과 사적 이전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 저축이나 부채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비 감소 폭이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영향도 컸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여행, 교육, 숙박, 유흥에서 소비가 많이 감소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업종들에서 소비가 많

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친 영향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10~20%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담은 두 편의 분석은 각기 다른 자료를 사용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에 가구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감염병 확산이 완화되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경제활동의 회복 추이가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가구 지출의 감소는 고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관측된 반면, 감염병 확산이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지출이 회복되었다. 가구의 소비지출 회복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보다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컸지만,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 사용 기한이 제한된 보조금의 지급은 소비지출을 높이는 효과가 바로 관측되었고, 지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 가구의 지출도 증가시켰다. 2020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가구 경제의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조금 참으면 지나갈 것 같았던 감염병 위기는 확산과 안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2020년 내내 지속되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일상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었고, 우리 사회는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요인들이 역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경제활동 역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일거리가 사라져 무급휴직에 내몰린 근로자,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자영업자는 당장의 생계유지를 걱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대면하거나 집단적으로 향유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관련 산업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서는 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지출에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의 가구 경제활동 변화를 분석한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세계적인 방역위기 및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일부 선진 국가에서도 의료체계가 붕괴되었고, 주요 지역에 사회적 봉쇄 조치(lockdown)가 시행되었다.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사회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방역체계를 갖추었다. 한편으로는 감염병의 확진자를 조기에 선별·격리한 후 감염병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면서 감염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예방하였다. 정부는 긴급하게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일시적인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였다. 고용보험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보조금을 노동시장 취약집단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가구와 기업의 체감 경기는 과거 경험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상으로 급격히 얼어붙었고,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지속될수록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는 과거에 경험한 경제위기와는 다소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인 경제위기에서도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에 경제적인 피해가 우선적으로 집중되며, 노동소득의 감소에 비해 지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된다.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공적 이전을 지원하고, 개별 가구도 사적 이전을 동원하거나 저축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부채를 늘려서라도 필수적인 소비지출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가구에서도 위험회피적(risk averse) 성향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지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위기 가구에 비해 지출의 감소 정도는 더 적다.

그런데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에서는 개별 가구에서 소득보다 지출의 변화가 더 크게 관측된다는 차이가 있다. 대면 서비스 관련 자영업 가구와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노동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이들 집단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은 다른 경제위기와 비슷하지만, 소득 변화가 거의 없는 가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지출 감소가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방역 수준을 높이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가구 지출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노동소득이 감소한 가구에서는 가구 지출이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코로나19 확산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보다 지출의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하고, 소득감소 완화와 소비지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인 보조금

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는 확산 초기 2단계에서 3단계를 거쳐서 현재는 다섯 단계로 세분화되었고, 각 단계 내에서도 지역별 신규 확진자 추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정해서 적용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은 확산 초기에는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취약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지급되었지만, 5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성격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 후로는 다시 소상공인이나 노동시장 취약집단,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보조금의 대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과, 정부의 재정부담과 소득 감소의 차이를 고려하면 피해 가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다.

감염병 확산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2020년의 위기 상황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던 이전의 감염병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 감소에 비해 지출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제위기와의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새로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보편 급여와 선별 급여라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보조금 지급이 보인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는 분석은 향후의 중장기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이 보고서는 2020년 상반기에 감염병이 확산되었다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가구 경제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두 편의 연구로 구성된다. 두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는 최근에 경험한 사회적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종단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각기 다른 두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및

4 코로나19 확산과 가계 지출 변화

완화 시기에 개별 가구가 어떤 경제적 변화를 보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정부 보조금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다른 영향요인의 변화를 통제한 조건에서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완화 과정 및 정부와 사회의 대응에 기초하여 2020년 상반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가구 소득, 지출 변화를 2019년의 변화와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

제3장에서는 신용카드 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신용카드 지출액 자료는 일별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개별 변화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지역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분석방법은 2장과 마찬가지로 2019년의 변화와 2020년의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

제4장에서는 위의 두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제 2 장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¹⁾

제1절 머리말

감염병의 확산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 해당하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감염병의 확산은 훨씬 더 큰 위기로 이어진다. 정부와 기업, 개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은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그러한 조치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가구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나 지역봉쇄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지출 규모가 줄어들고, 오프라인 위주의 소비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달라진다. 대면 서비스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하고,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충격은 개별 가구의 노동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반대로 감염병 확산 추이가 완화되거나, 정부가 위기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가구 소득과 지출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사회도 지난 일 년간 감염병 확산의 등락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감소한 소비가 충분히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 글은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었다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분석한다.

1) 이 장의 내용 일부는 본 연구를 토대로 기고한 이승호(2020),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노동리뷰』 12월호(한국노동연구원)에 실려 있음을 밝힌다.

특정 사건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는 일반적인 방법은, 분석대상을 추적 조사한 중단 자료를 이용하여 사건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확산과 안정을 반복한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의 단기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와 사회의 대응에 기초하여 2020년 상반기를 2개월씩 묶어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먼저, 1월과 2월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 시점에 해당한다. 1월에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2월 중순 이후이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점은 2월 하순이었다. 2월 중순부터 개인 수준에서 자발적인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지만,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3월과 4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 일상적인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었고, 입학과 개학이 연기되었으며, 필수적인 경제활동 이외의 대면을 요하는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중단 혹은 연기되었다. 고용률이 두 달에 걸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어진 5월과 6월은 신규 확진자 추이가 안정화되면서 감염병의 위험과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적응 노력이 시작되었다. 고용률은 감소 추이를 멈추었고, 정부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 연구는 2020년 1~2월과 3~4월의 가구 소득, 지출 차이를 비교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위축 정도를 분석하고, 3~4월과 5~6월의 변화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의 진정, 거리두기 완화 및 정부 보조금 지급이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소득과 지출 변화를 더 상세히 보기 위해서 소득분위별 변화를 비교하고, 소득과 지출의 항목별 변화를 같이 살펴본다. 이 분석결과는 감염병의 확산과 정부의 초기 대응이 가구 경제에 미친 단기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이후의 정책 대응을 준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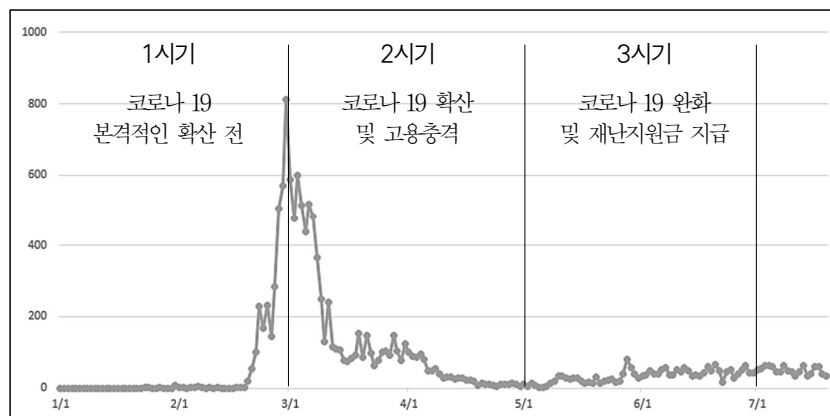
제2절 문헌검토

1. 코로나19 확산의 월별 변화 추이

한국에서 코로나19의 첫 확진자가 등장한 것은 2020년 1월 20일이였다. 중국에서 입국한 감염자가 확인되자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후 1월 24~26일에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 감염자가 연이어 확인되었고,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였다. 그러나 1월까지 정부의 조치는 밖으로는 감염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안으로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두었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퍼지긴 했지만, 비감염자들이 체감하는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사회적 대응 강도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은 2월 17일 국내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타나고, 2월 19일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서부터이다(그림 2-1 참조). 정부

[그림 2-1] 신규 확진자 수 변화 추이



자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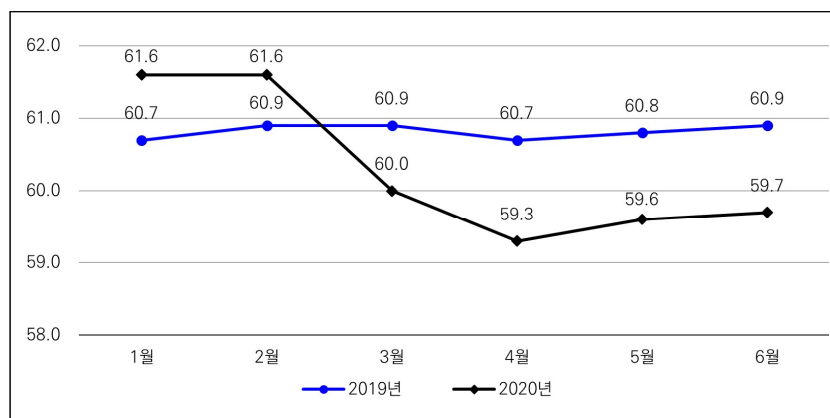
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일상에서 집단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사람들이 밀집된 상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월 말에는 하루에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높아졌다. 2월 27일에는 공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시작되었고, 사람과 마주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편, 적어도 2월까지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2020년 1월과 2월의 계절조정 고용률은 모두 61.6%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2-2 참조). 2019년의 1~2월 고용률과 비교하면, 2020년 1~2월의 고용률 수준은 0.7~0.9%p 높았다. 2019년 1~2월에 관측된 미미한 고용률 증가 추이가 2020년에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발표된 통계자료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를 기준으로 측정되어, 2월 말에 발생한 감염병 확산 추이가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월과 4월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무화되었다. 정부는 3월 2일 예정되었던 초·중·고등학교 신학기 입학 및 개학을 수차례에 걸

[그림 2-2] 2019~2020년의 1~6월 계절조정 고용률 변화 추이

(단위: %)



주: 계절조정 고용률은 해당 월에 실제 관측된 고용률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월별 고용동향』.

쳐서 연기하였다.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인 등교수업은 결국 5월 말에서야 시행되었다. 3월 22일에는 정부가 직접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행사나 여행을 연기하면서 가능한 집 안에 머물 것을 권고하였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시설들은 운영이 중단되었다. 처음에는 15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한정했지만, 이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지속되면서 두 차례 기한이 연장되었고 결국 4월을 넘겼다.

3월과 4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영향은 다양한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2020)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인구 이동량은 1월 -3.5%, 2월 -13.7% 수준에서, 3월 -31.0%, 4월 -22.7%로 크게 감소하였다. 여가시설의 인구 이동량은 1월(13.8%), 2월(-22.1%)에 비해 3월(-53.9%)과 4월(-48.9%)에 더 큰 폭의 감소 추이를 보였다. 사회적 이동의 지표로 자주 인용되는 영화관 주말 관객 수에서도 3월 2주는 2011년 집계 시작 후 최저치인 23.8만 명을 기록하였고, 이 수치는 6주 연속 최저 기록을 경신하면서 7.9만 명까지 줄어든 후, 4월 3주에 들어서야 하락세를 멈추었다.²⁾

3월과 4월에는 노동시장의 변화도 확연하게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 집단의 3월 계절조정 고용률은 60.0%로 2월 대비 1.6%p 감소하였다. 2019년 상반기 동안의 계절조정 고용률이 0.2%p 변화에 그쳤다는 점과 비교하면, 고용충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고용률 변화가 매우 단기간에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국민이 체감한 변화 정도는 그 이상일 것이다. 1~2월까지의 2020년의 고용률이 2019년보다 높았지만, 3월의 변화만으로 고용률 수준이 역전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충격은 4월에도 지속되었다. 2020년 4월의 계절조정 고용률은 59.3%로 3월 대비 0.7%p 더 낮아졌다. 2019년의 같은 기간에도 고용률이 0.2%p 감소했지만, 2020년의 감소 정도가 훨씬 컸다.

다행스럽게도 5월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단감염이 감소하였고, 신규 확진자 규모도 이전에 비해 안정적

2)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http://www.kobis.or.kr>) 참조(2020. 8. 24. 접속).

인 추이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말부터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의 비(非)밀집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였고,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감염 예방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기본 지침을 전환하였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이 허용되었고,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운영이 재개되는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정부는 3월 말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발표했지만,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논쟁을 거쳐서 4월 말에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다른 사회보장급여로 계좌번호가 확보되어 있는 취약계층은 5월 4일부터 계좌이체 형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5월 13일 온라인 신청, 5월 18일 방문 신청을 시작하여 5월 말까지 지급대상 가구의 98.2%에게 총 13조 4,282억 원이 지급되었다.

고용률 또한 3~4월과 달리 확연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5월의 계절조정 고용률은 59.6%로 4월 대비 0.3%p 증가하였다.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의 고용률(2019년 4월 60.7%)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3~4월에 이어진 고용률의 감소 추이가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2020년 6월의 계절조정 고용률은 59.7%로 5월 대비 0.1%p 높아졌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고용충격에서의 반등이 두 달 연속 이어진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 5~6월의 고용률 변화 추이와도 동일한 수준이다.

5월 이후에도 이태원 클럽이나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이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고용률의 감소 추이도 멈추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한계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소비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2월 이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잔뜩 움

츠렸던 소비활동이 기지개를 켜고 반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정부의 대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를 월별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월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정부 대응이 시작되었으나,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2월은 중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었지만,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된 시점이 2월 말이었고, 아직까지는 일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였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2020년 1~2월의 고용률은 2019년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변화 추이도 차이가 없었다.

3월과 4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된 시기이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었고, 필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대면을 요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이 중단 혹은 연기되었다. 여행과 외식 등의 산업에서는 소비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 내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관측되었고, 두 달에 걸쳐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5월과 6월은 이전에 비해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가 안정화되면서 감염병의 위험과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인 적응이 시작된 시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위축되었던 소비활동도 기지개를 폈다. 등교가 시작되었고, 업종별 영업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득 감소 및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5월 말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5월과 6월에 걸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고용률은 감소 추이를 멈추었다. 반등 정도는 크지 않았지만, 이전까지의 급격한 감소 추이가 멈춘 것만으로도 앞 시기와는 확연한 차이라고 판단한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정부 대응의 변화 추이에 기초하여 2장에서의 연구모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먼저, 1~2월(1시기)과 3~4월(2시기)의 가구 소득, 지출 차이를 비교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위축 정도를 분석한다. 비슷하게 3~4월(2시기)과

〈표 2-1〉 연구모형 및 시기 구분

	1시기		2시기		3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모형 1. 코로나19 확산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확산 전		코로나19 확산 후			
모형 2. 코로나19 완화와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완화 및 재난지원금 지급 전		코로나19 완화 및 재난지원금 지급 후	

자료: 저자 작성.

5~6월(3시기)의 변화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의 진정, 거리두기 완화 및 정부 보조금 지급이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2. 감염병 확산이 가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감염병의 확산은 일종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 해당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그러한 조치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여건 변화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상향 조정으로 인한 영향, 이질적인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한 영향,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최근의 관련 실증연구들을 검토한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향

감염병의 확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접촉이 높은 활동을 줄이는 과정에서 소득과 지출의 변화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확산 정도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 정부의 대응도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가구의 경제적 변화 정도도 그에 맞춰 달라진다.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일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방역 활동을

확대한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민간의 전문가 집단에서 먼저 제기되었고, 이어서 위험회피적(risk averse)인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조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외식과 모임, 여가, 문화활동, 여행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외부활동들이 우선적으로 감소하였다. 줄어드는 소비의 일부는 다른 대체 소비로 채워진다. 예컨대, 외식이 줄면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 위해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지출이 늘어나는 식이다. 그러나 여행과 같은 외부활동은 적절한 대체활동을 찾기가 어렵고, 집에서의 여가는 기존의 외부활동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대체 소비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출의 품목이 달라지고, 가격 차이에 따라 지출 수준이 영향을 받게 되며, 대체 소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변화가 관측된다.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한 변화 정도는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집단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의 방역 조치로 감염병 확산 추이가 잡히지 않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화하고, 나아가서는 특정 지역에 대해 이동을 제한(lockdown)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정부의 대응이 강경할수록, 위험회피적이지 않은 개인들도 의무적으로 외부활동을 줄이게 되며, 그로 인해 가구의 경제활동도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른바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소매점에서의 필수품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지만(Baker et al., 2020), 일반적으로는 대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매출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난다. 동시에 오프라인에서의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내구재 구입 등의 지출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가구 경제의 변화는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4월 이후 소비지출이 전월 대비 13.6% 줄어들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BEA, 2020).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소비지출 수준이 이전 대비 27%가량 감소했으며,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된 우한

지역에서는 지출의 감소 정도가 70%로 가장 높았다(Chen et al., 2020).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은 과거의 감염병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였고, 상당한 수준에서 오프라인 소비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전후 프랑스의 카드 지출 변화를 분석한 Bounie et al.(2020)의 연구에 의하면, 오프라인 지출 감소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 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부적인 변화를 상당 정도 완화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완화 정도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더 커질 것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출의 변화 정도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이상의 집단에서는 비필수적인 소비지출을 줄이는 변화가 관측되기 쉽지만, 이미 대부분의 소비가 필수적인 지출로 구성된 저소득층에서는 지출의 변화 정도가 적을 수 있다. 비슷하게, 온라인 소비에 익숙한 청년 집단에 비해 고령 집단에서 지출 감소가 더 크게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득보다는 지출을 중심으로 가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는, 대체가 가능한 지출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전반적인 지출 수준이 감소한다.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지출과 외부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우선적으로 감소하지만, 오프라인 소비활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지출 규모의 전면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자발적인 거리두기에서,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역별 이동제한 등 사회적인 대응 강도가 높아질수록 가구 지출의 변화 정도 역시 증가한다. 온라인 소비는 오프라인의 소비 제약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효과를 보이고,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의 감소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나.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한 영향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사회

적으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 소비가 위축된 산업에서는 사업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은 실직을 경험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결정하는 등의 고용충격이 관측된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노동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의 획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대면 접촉이 빈번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불안정 임금노동자의 실업이나 노동시간 감소가 발생하고, 관련 업종에 속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가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도 정규 노동시간 이외의 초과 노동이 줄어들고, 전에 없던 교대제가 시행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들은 모두 해당 가구에 있어서 주요 소득원의 상실 또는 감소를 의미하며, 특히 가구주의 실직은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현주 외, 2016).

일반적으로 감염병의 확산에 고용이 취약해지기 쉬운 일자리로는 필수 산업에 속하지 않고(non-essential),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어려우며(low work-from-home), 대면접촉의 빈도가 높은(high physical-proximity) 일자리들이 꼽힌다(오삼일·이상아, 2020). 정부가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경우에도 필수 산업으로 여겨지는 경제활동은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고, 비필수적인 산업에 속하여 제재를 받더라도 재택근무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타인과의 대면접촉이 많은 일자리는 관련 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된다는 점에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여러 서구 국가들과 달리 이동제한 조치까지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용충격이 관측되었다. 오삼일·이상아(2020)에 의하면, 전체 일자리의 55%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감염병의 확산에 취약한 일자리에는 저학력의 여성, 고령자 및 청년이 주로 종사한다(김유선, 202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이라고 고용충격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 가설에 의하면, 위험 회피적인 개인은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일정한 지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Malley and Moutos, 1996; 이현주 외, 2016). 위험이나 불확실한 정도가 클수록 목표로 하는 저축량이 증가하고, 객관적인 위험 정도와 별도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위험 정도 역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Benito, 2006; Lozza et al., 2012).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관측된 전반적인 소비지출 감소는 예비적인 동기에 의해 저축심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박종규, 2008).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수록 고용불안을 느끼는 집단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들 집단에서는 저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변화가 관측될 수 있다.

정리하면, 감염병의 확산은 불안정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줄이고, 대면 빈도가 높은 산업의 자영업자 매출을 줄이는 경로로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해당 가구의 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집단은 주로 대면 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는 집단이고, 해당 일자리에는 저학력의 여성, 고령자, 청년 등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이 주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을 늘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영향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변화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출 패턴 및 지출 규모의 감소, 고용충격의 확산으로 취약집단의 노동시장 소득 감소, 위험회피적인 중산층의 저축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지출의 감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소비지출이 급감

하여 실물경제가 부진에 빠지면, 그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개별 가구의 노동소득이 더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정책을 통해 소비지출이 급감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기업의 폐업을 막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ILO, 2020).

물론 정부는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은 시기에도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제도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경험한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경기침체 시기에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적이전제도는 가구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여 최소한의 소비지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작용한다.

그런데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에서, 가구 경제의 변화가 실업이나 빈곤을 경험한 가구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감소와 매출 감소도 가구 소득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그 외의 가구에서도 외부활동이 제약되는 생활방식의 변화,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 자체가 지출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해진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작동하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감염병의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어렵다. 이에 각국 정부는 기존 제도의 대상과 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긴급 보조금을 편성하여 감염병 확산의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확산 초기에 저소득층과 고용위기를 겪은 집단을 선별하여 소득 상실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감염병이 급격히 확산된 후에는 보편적인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선별적인 성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가구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급된 공적 이전 중에서 어느 정도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된 조건에서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반

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되레 불평등을 강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Chetty et al., 2020; Kim et al., 2020). 또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역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동성이 적은 저소득층에서 소비 증가가 더 즉각적으로 관측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Baker et al., 2020).

요컨대, 정부가 기존에 운영해 온 사회보장제도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과 지출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보편적인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절 분석자료와 방법

1. 분석자료

2장의 분석에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사용한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대상으로 가구 단위 소득과 지출의 상세한 내역과 함께, 가구 구성원의 인구·사회적 변수 등을 제공한다.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매월 조사가 이뤄져서 단기적인 경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가 비교적 빠르게 공표되며, 연구가 진행되는 현재 시점에서 2020년의 조사 결과는 1~6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았을 경우의 소득, 지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1~6월의 조사자료를 같이 활용한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급격한 사회 변화의 영향을 추정하려면, 가급적 조사 주기가 짧은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는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포함하면서 가구의 소득과 지출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조사 주기가 가장 짧은 자료이다. 일이나 주 단위의

세밀한 변화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고,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조건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변수는 가구 소득과 지출의 총금액 및 항목별 금액이다.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측정하고, 지출은 소비지출이 12개 항목, 비소비지출이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집단별 특성 차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변수와 가구규모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2. 분석방법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기초하여 2020년 상반기를 1~2월(1시기), 3~4월(2시기), 5~6월(3시기)의 세 시기로 구분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구 소득과 지출의 감소는 1시기와 2시기를 비교하여 분석하고(모형 1), 코로나19 완화 및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회복 정도는 2시기와 3시기를 비교하여 추정한다(모형 2).

분석방법은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한다. 이 방법은 특정 사건(혹은 정책개입)을 경험한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control group)을 설정하고, 두 집단 간에 사건이 발생한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영향을 추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의 조사대상 가구가 처치집단, 2019년의 조사대상 가구가 비교집단이 된다. 공통 추세(parallel trend) 가정에 의해 2019년의 가구 소득, 지출 변화는 2020년에 감염병이 없었을 경우에 관측되었을 가상의(counterfactual) 변화로 간주된다. 이 가정으로 명절이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반복되는 소득, 지출 변화와 감염병 확산이나 완화로 인한 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 비교집단으로 2019년 자료만 사용하는 것은 「가계동향조사」가 이 시점부터 표본과 조사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이중차분법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식 (2-1)과 같다. $After_i$ 는 시기변수이다. 모형 1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1시

기)이면 0, 이후(2시기)이면 1이다. 모형 2에서는 코로나19 완화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이전(2시기)이면 0, 이후(3시기)이면 1이 된다. $Treat_i$ 은 집단변수이다. 두 모형 모두에서 2019년 가구가 0, 2020년 가구가 1로 정의된다. 코로나19 관련 변화의 효과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인 β_3 를 통해 확인한다. X_i 는 통제변수들을 의미하며, 가구주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과 가구규모 변수를 포함한다. 결과변수는 소득과 지출 금액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한다.

$$\ln Y_i = \alpha + \beta_1 After_i + \beta_2 Treat_i + \beta_3 (After_i \times Treat_i) + \gamma X_i + \epsilon_i \quad (2-1)$$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분석결과와 하위집단별, 소득/지출 항목별 분석결과를 같이 제시한다.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가구의 소득분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분위는 가구규모로 균등화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다.³⁾ 추가 분석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과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친 영향이 소득계층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제4절 가구 소득과 지출 변화

1. 2019~2020년 소득, 지출 변화 추이

다음의 <표 2-2>는 2019~2020년 상반기 가구 소득과 지출의 시기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기 이전 시점인 1시기에는 2019년과 2020년의 가구 소득과 지출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

3) 시장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값이다.

4) 가구 소득과 지출의 월별 변화 추이는 부록에서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표 2-2〉 2019~2020년 소득, 지출 변화 및 이중차분 결과

(단위: 만 원/월)

		1시기(1~2월)	2시기(3~4월)	3시기(5~6월)
가구 소득	2019년	426.8	405.5	413.0
	2020년	438.2	403.3	433.5
	모형 1	-0.044(0.022)*		
	모형 2		0.111(0.020)***	
가구 지출	2019년	348.1	328.3	321.8
	2020년	341.6	297.3	327.8
	모형 1	-0.081(0.012)***		
	모형 2		0.124(0.012)***	

주: 모든 이중차분 모형은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상호작용항의 회귀 계수와 표준오차만 제시하였음. $p<.05$: *, $p<.01$: **, $p<.001$: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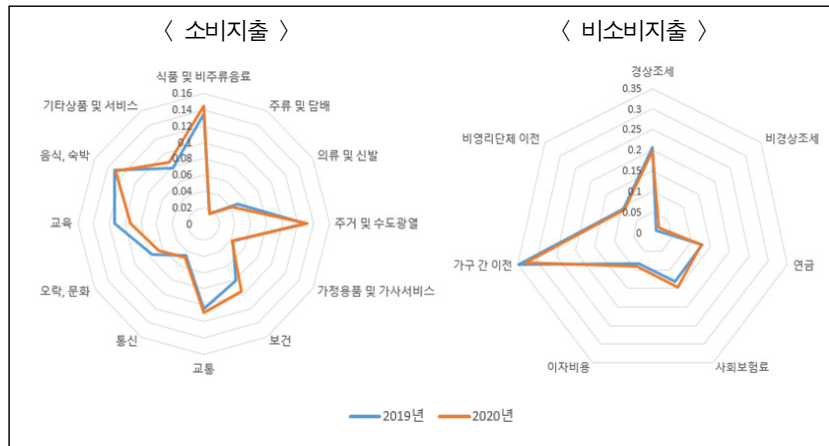
다. 소득은 2020년이 2.7% 높았는데, 시간에 따른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출의 경우에는 반대로 2019년의 지출이 1.8% 더 높았다. 2020년 2월 하순의 코로나19 확산이 2020년 1시기의 지출에 이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그림 2-3]에서 2019년과 2020년의 1~2월 지출 구성을 비교하였다. 소비지출의 일부 항목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2020년의 소비지출은 2019년에 비해 보건(18.0%), 기타 소비(10.0%), 식품(7.3%), 교통(5.3%) 등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교육(-17.5%), 의류(-17.5%), 오락·문화(-12.6%) 등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비소비지출에서는 2019년과 2020년의 구성이 대체로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지출 구성 차이는 2020년 1~2월의 지출내역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2월은 중순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감염자 수 급증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개인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시작한 시점이다. 소비지출이 증가한 항목을 보면, 마스크 구입 비용, 가정 내 식사를 위한 지출, 대중교통을 피하려는 경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지출이 감소한 항목은 자녀의 학원 이용을 줄이고, 쇼핑이나 여가를 위한

[그림 2-3] 2019~2020년 1~2월 가구 지출 구성 비교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외부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월 단위로 측정된 분석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로 규정했지만, 일부 소비지출 항목에서는 이미 감염병 확산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두 시점 사이 소비지출의 차이는 이 연구의 분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모형 1의 소득 변화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2시기의 소득은 1시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 변화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향과 계절 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계절적 요인만 있었던 2019년에도 2시기의 소득은 1시기보다 적었으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은 그 차이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사이 진행된 인구고령화, 1인가구 증가, 교육수준 향상 등의 변화도 가구의 소득,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 (2-1)은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된 조건에서 코로나19의 확대에 의한 변화를 추정한다. 분석결과,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0.044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구 소득이 약 4.4%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가구 지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2020년 2시기의 가구 지출은 1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2019년 같은 시기에도 가구 지출이 감소하였다. 감염병 확산 효과는 두 변화의 차분으로 확인한다. 여기에 다른 영향요인들의 변화를 같이 고려한 모형 1의 분석결과, 회귀분석 계수는 -0.081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구 지출이 8.1% 감소한 것으로 추정케 한다. 2월 말의 지출 감소가 1시기에 포함되어 과소추정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감염병의 확산은 소득보다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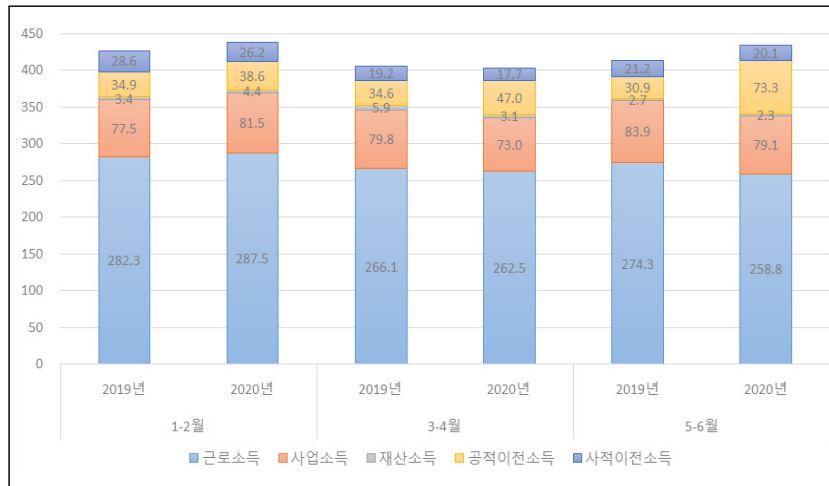
코로나19 완화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가구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2020년 3시기 가구 소득은 2시기 소득보다 높았지만, 2019년에도 같은 시기에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통제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 계수 값은 0.111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용충격이 완화되고,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의 변화가 가구 소득을 11.1% 높이는 효과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3시기의 가구 소득은 정부 보조금의 지급으로 일시적이나마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같은 시기 가구 지출의 변화를 보면, 2019년에는 5~6월의 가구 지출이 3~4월보다 감소했지만, 2020년에는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모형 2 분석에서의 상호작용항 회귀계수는 0.124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완화 및 정부 보조금이 가구 지출을 12.4%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가구 소득과 마찬가지로 지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급한 일부 보조금이 4월에도 지급되었음을 고려하면, 모형 2의 결과 역시 소득과 지출의 증가 정도를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그림 2-4]에서는 앞서 구분한 세 시기별로 2019년과 2020년의 소득 구성을 비교하였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 시점인 1~2월에는 2019년과 2020년의 소득 구성이 대체로 비슷하였다. 근로소득은 두 시점 모두에서 총소득의 65~66%를 차지하였고, 2020년 2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사업소득의 감소가 관측되지 않

[그림 2-4] 2019~2020년의 시기별 소득 구성 비교

(단위: 만 원/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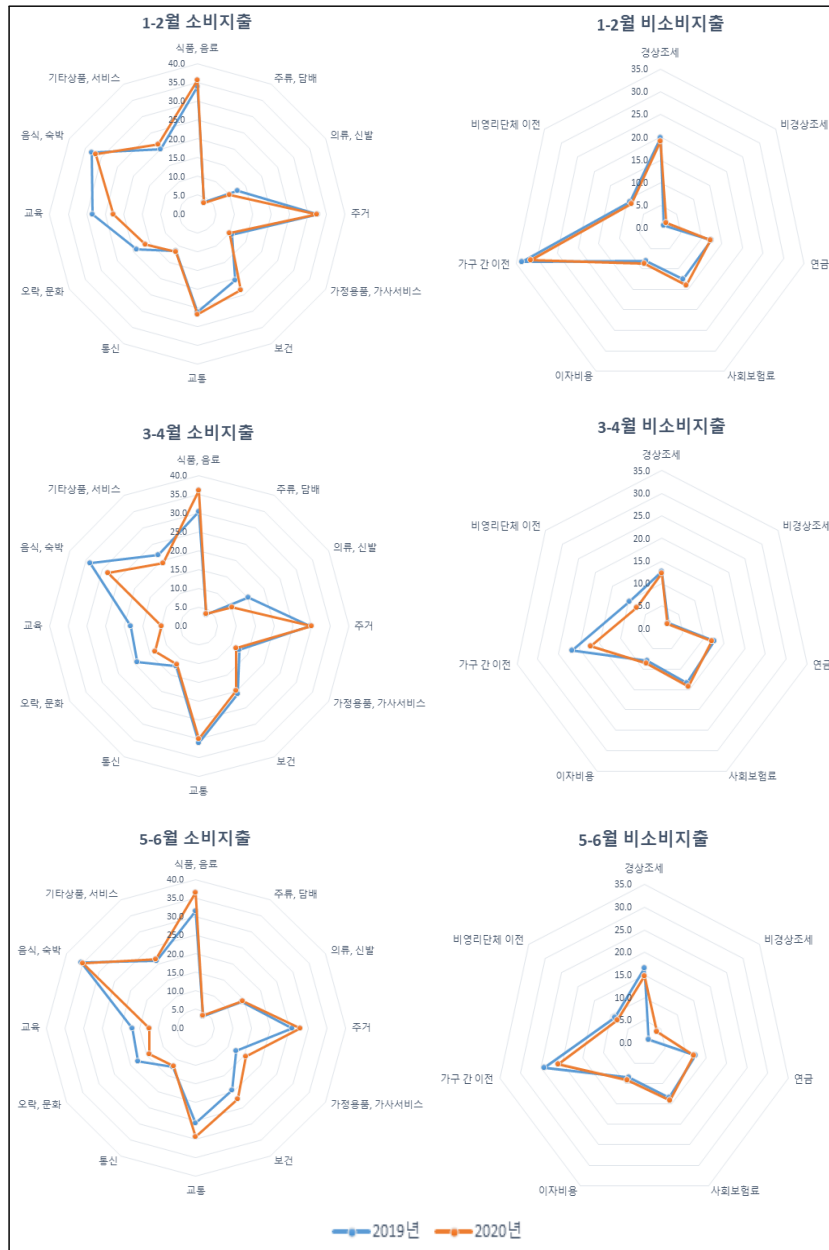
았다.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이 약간 증가하고,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했지만,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려웠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고용충격이 확산된 3~4월의 소득 구성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소득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20년의 소득은 2019년에 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규모가 늘어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촉진수당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2020년 3~4월의 소득은 1~2월보다 감소했지만, 공적 이전의 확대로 2019년 3~4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다소 완화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6월의 소득구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020년의 소득은 2019년에 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작고,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3~4월의 소득과 비교하면, 사업소득이 일부 회복되었지만 근로소득의 감소 추이가 계속되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그러한 소득 감소를 상쇄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수준으로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보였다.

〔그림 2-5〕 2019~2020년의 시기별 소득 구성 비교

(단위: 만 원/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그림 2-5]는 세 시기별로 2019년과 2020년의 지출 구성 차이를 소비 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1~2월의 소비지출은 소득과 다르게, 2019~2020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관측되었다. 2020년의 소비지출은 2019년에 비해 식품, 음료/보건 관련 지출이 많았고, 의류·신발, 오락·문화, 교육 등의 지출은 작았다. 이러한 차이는 2020년 1~2월의 지출내역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일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2월 말에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발적인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월 단위로 조사된 분석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1~2월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점으로 규정했지만, 외부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구입하는 등의 행동변화는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소비지출에서는 두 시점의 구성이 대체로 유사하였다.⁵⁾

2. 소득분위별 소득, 지출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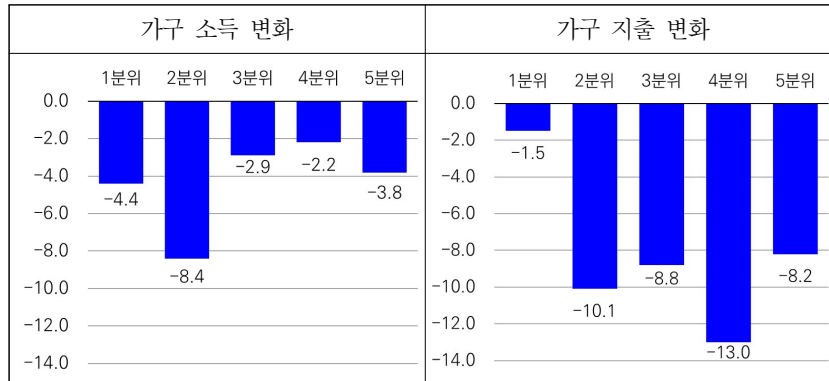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중차분 결과는 코로나19 관련 변화로 인한 평균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그런데 고용충격은 대면 서비스 관련 산업의 자영업자와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시장 취약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행이나 여가 관련 지출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에서는, 소득 5분위 집단별로 코로나19 관련 변화가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그림 2-6]은 모형 1의 분석을 소득분위별로 각각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의 왼쪽이 가구 소득 변화를, 오른쪽이 가구 지출 변화를 보여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 소득과 지출의 감소가 관측되었다. 2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율이 8.4%로 가장 두드러졌고, 다른 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2.2~4.4% 수준이었다. 지출 변화에서는 4분위 가구의 지출이 13.0%로 가장 많이 줄었지만, 2~5분위에 속한 다른 가구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지출이 감소하였다.

5) 1~2월의 비소비지출에서 가구 간 이전의 비중이 유독 높은 것은 이 시기에 설 명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6] 소득분위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구 소득, 지출 변화(모형 1)

(단위: %)



주: 상호작용항의 계수값에 100을 곱한 수치임. 표준오차는 <부표 2-1>에 제시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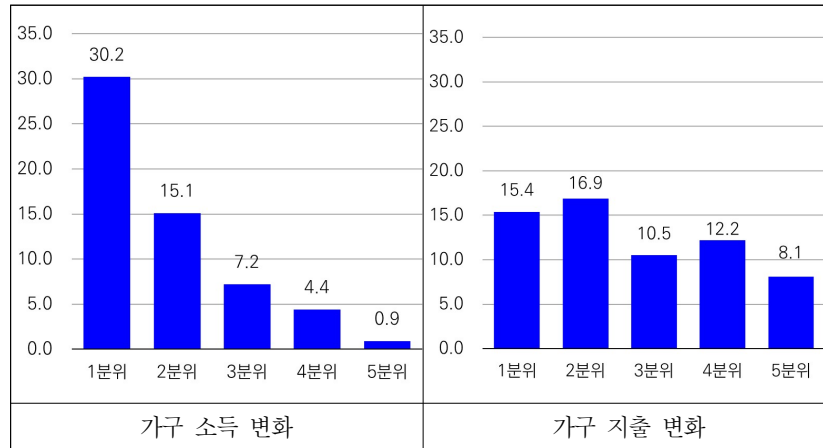
소득분위별로 소득과 지출의 변화 정도가 상이하였다. 1분위 저소득 가구에서는 소득에 비해 지출의 감소 정도가 작았다. 필수재 중심의 소비에서 지출을 더 줄이기가 어려운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⁶⁾ 2분위 가구에서는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는데,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이 속해 있어서 고용충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3~5분위 가구에서는 소득에 비해 지출의 감소율이 훨씬 더 높았다. 감염병의 확산은 다른 경제위기과 다르게, 소득 감소를 거치지 않고도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는 고용충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구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은 소득 5분위 집단별로 모형 2의 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왼쪽이 가구 소득 변화, 오른쪽이 가구 지출 변화이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그림 2-6]과 반대로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 소득과 지출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가구 소득 변화에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6) 손연정 외(2019)에서는 주거비, 식비, 공교육비를 필수재로, 통신비, 보건의료비를 준필수재로 분류한 바 있다.

(그림 2-7) 소득분위별 코로나19 완화 및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소득, 지출 변화(모형 2)

(단위: %)



주: 상호작용항의 계수값에 100을 곱한 수치임. 표준오차는 <부표 2-1>에 제시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높은 경향을 보였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0.2% 증가한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는 0.9%에 그쳤다. 분위별 소득 변화율 차이의 대부분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규모만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된 것에 기인한다. 소득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는 비슷했지만,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이 회복된 추이도 노동시장 취약집단이 속한 저소득 가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가구 지출에서도 대체로 저소득 가구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분위 가구의 지출이 16.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5분위 가구의 지출은 8.1% 증가에 그쳤다. 집단별 차이가 비교적 작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소비지출의 회복 양상이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5분위 가구에서는 소득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지출이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서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지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던 1분위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지출 증가가 관측

되었는데,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3개월로 제한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감염병이 완화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변화는 모든 소득분위의 지출에 비교적 고른 영향을 미쳤다.

3. 세부항목별 소득, 지출 변화 비교

위의 분석은 코로나19 관련 변화가 소득분위에 따라 가구 소득과 지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소득분위별 차이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 각 소득분위 집단에 대해 소득과 지출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모형 1과 모형 2의 분석을 수행하였다.⁷⁾ 가구 소득의 항목별 변화율은 <표 2-3>과 <표 2-4>에 정리하였다.

먼저, <표 2-3>을 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에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변화는 주로 근로소득의 감소에 기인하였다. 1분위 가구에서는 근로소득 감소율이 평균 37.2%였고, 2분위에서는 그보다 높은 45.8% 수준이었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의 감소율이 더 높았다. 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정부가 긴급하게 공적 이전 지출을 늘렸지만, 전체적인 소득 감소를 막기에는 급여수준이 충분

<표 2-3> 소득분위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항목 변화율(모형 1)

(단위: %)

모형1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소득	-37.2	-45.8	1.3	-2.6	-5.1
사업소득	-2.3	6.4	-23.7	-14.7	-17.7
재산소득	-6.6	1.0	-5.8	0.1	3.4
공적이전소득	17.4	30.2	25.4	52.3	33.3
사적이전소득	-9.1	10.3	11.0	9.4	-5.0

주: 상호작용항의 계수 값에 100을 곱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7)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과 지출의 세부항목별 변화는 부록에서 <부표 2-2>에 제시하였다.

하지 않았다. 특히, 2분위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이 평균 23.6만 원가량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은 6.8만 원 증가에 그쳤다(<부표 2-3> 참조).

<표 2-4>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의 소득항목별 변화율을 보여준다. 고용충격이 일부 회복되면서 2분위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4~5분위에서 사업소득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노동소득의 증가율은 직전 시기의 감소를 만회하기에는 적은 편이었고, 다른 소득분위에서는 3시기에도 대체로 근로소득의 감소가 이어졌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3시기의 가구 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소득 변화율에서는 기존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낮았던 중산층 이상 가구의 증가율이 높았지만, 절대적인 소득 금액의 변화는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부표 2-3> 참조).

[그림 2-8]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소득분위별로 각 지출항목의 변화를 보여준다. 감염병의 확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출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소비지출에서는 외부활동과 관련이 높은 교육, 의료·신발, 음식·숙박, 교통 항목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였고, 비소비지출에서는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식품·음료, 주류·담배 항목의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변화를 보였다. 소득분위별로

<표 2-4> 소득분위별 코로나19 완화와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득항목 변화율(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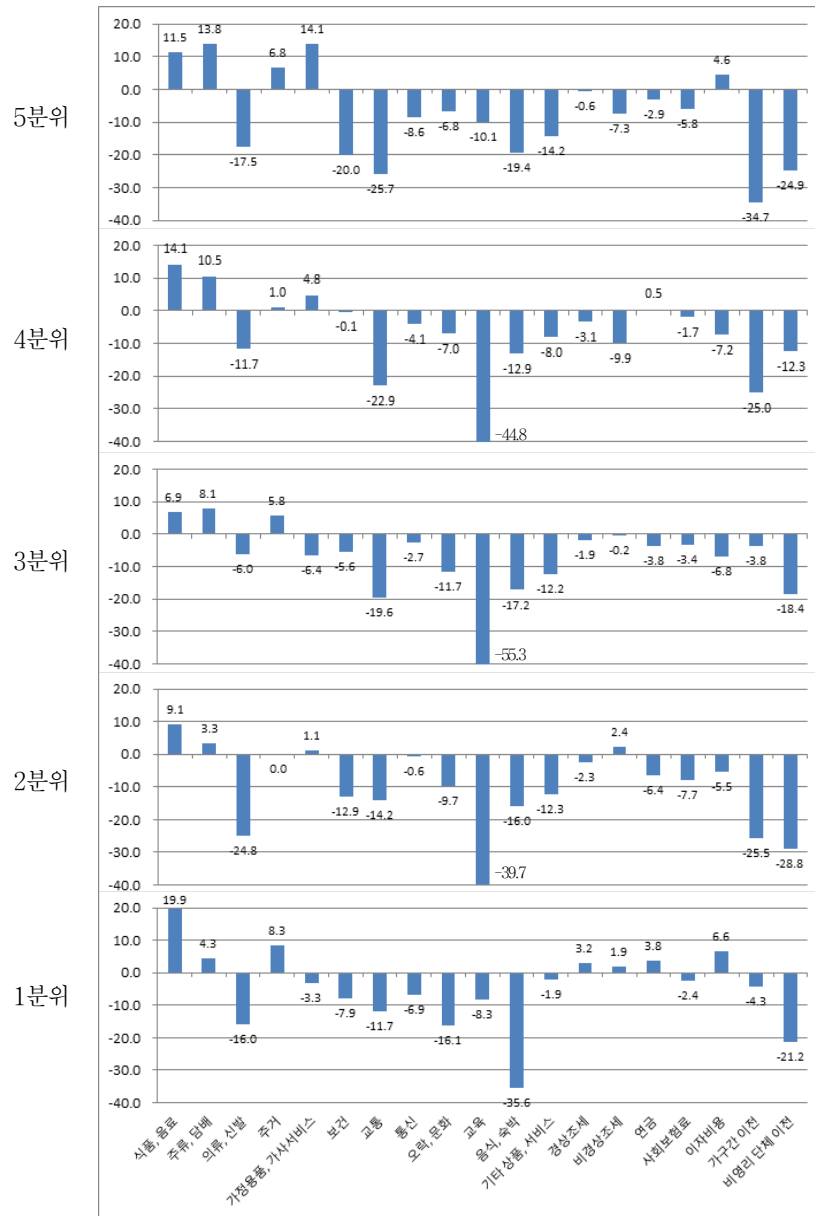
(단위: %)

모형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소득	-2.9	16.2	1.0	-15.6	-6.7
사업소득	2.0	-13.8	2.9	10.8	5.3
재산소득	0.7	3.0	7.1	6.7	-1.8
공적이전소득	51.0	101.0	107.2	105.0	130.0
사적이전소득	-7.0	-6.2	6.5	4.0	6.8

주: 상호작용항의 계수 값에 100을 곱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그림 2-8) 소득분위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출항목 변화(모형 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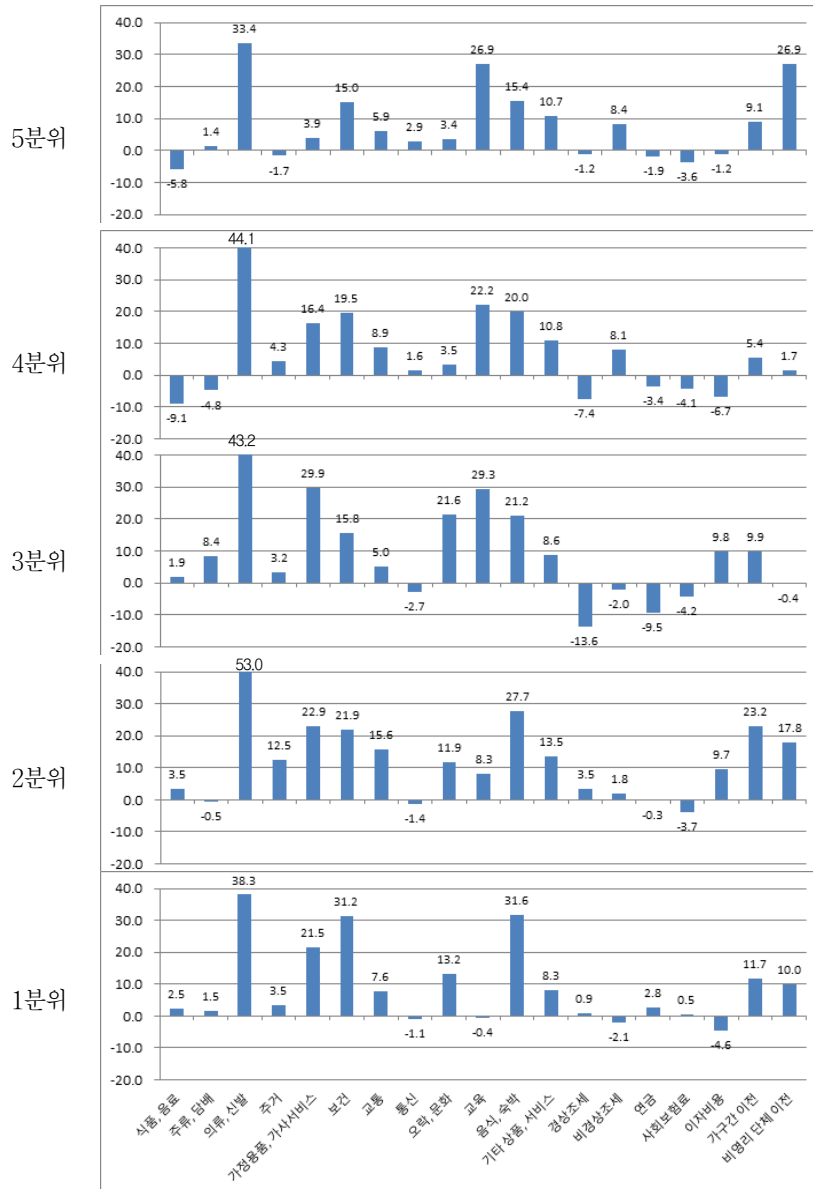
주: 상호작용항의 계수값에 100을 곱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32 코로나19 확산과 가계 지출 변화

(그림 2-9) 소득분위별 코로나19 완화와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지출항목 변화(모형 2)

(단위: %)



주: 상호작용항의 계수값에 100을 곱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관측되었다. 앞서 1분위 가구에서는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출금액의 변화가 적은 편이었지만, 개별 항목별 변화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림 2-9]는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의 지출 항목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앞의 그림과 반대로 모든 소득분위에서 대부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의류·신발, 음식·숙박, 교육,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 등 다수의 항목에서 지출 증가가 관측되었다. 대체로 코로나19의 확산 시기에 지출이 많이 감소했던 항목들에 해당한다. 지출 감소가 적었던 1분위 가구에서도 3시기에는 다른 소득분위와 비슷한 방향으로 지출 증가가 관측되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에는 3~5분위 가구에 비해 1분위와 2분위 가구에서 변화율이 낮은 편이었다.

제5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정부 보조금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다른 영향요인의 변화를 통제한 조건에서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완화 과정 및 정부와 사회의 대응에 기초하여 2020년 상반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가구 소득, 지출 변화를 2019년의 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은 가구 소득을 4.4%, 지출을 11.1% 감소시켰다. 감염병의 확산은 소득보다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가구 소득이 8.1%, 지출이 12.4% 증가하였다. 소득과 지출 모두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8) 소득분위별 지출 변화율의 차이는 각 분위에서 지출항목별 금액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가구 소득의 감소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관측되었지만, 저소득 가구는 근로소득 감소가, 고소득 가구는 사업소득 감소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1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서 소득 감소보다 지출의 감소가 더 크게 관측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는 소득 변화가 없이도 직접적으로 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 소득과 지출이 증가하였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과 지출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편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보조금의 지급은 지출 변화가 적은 1분위 가구에서도 다른 분위와 비슷한 방향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제 3 장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⁹⁾

제1절 머리말

이 장에서는 카드 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확진자는 2월 19일부터 증가하여서 2월 29일에 813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감소하였고, 4월부터는 100명 이하가 되었다. 정부는 2월 23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높였고, 이후 방역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던 2월 19일부터 4월 중순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이 감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코로나의 확산이 줄어든 상태이므로, 코로나19 확산의 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를 파악한다는 것은 코로나의 영향을 파악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9) 이 장의 내용 일부는 본 연구를 토대로 기고한 홍민기(2020),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노동리뷰』 12월호(한국노동연구원에 실려 있음)을 밝힌다.

〈표 3-1〉 1인당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단위: 원)

지역	중앙정부	지자체	중앙+지자체
대구	275,589	212,546	488,134
제주	273,757	155,325	429,082
전남	299,959	67,634	367,593
경기	269,232	97,119	366,351
경북	283,314	82,773	366,086
경남	279,375	58,744	338,118
광주	266,045	67,421	333,466
대전	268,108	64,697	332,806
서울	272,952	56,500	329,453
강원	286,147	41,911	328,058
인천	274,365	13,659	288,024
전북	282,434	5,245	287,679
충남	270,442	11,938	282,380
부산	280,796	0	280,796
울산	276,661	0	276,661
충북	274,682	0	274,682
세종	264,333	0	264,333
전국	274,923	64,416	339,340

자료: 17개 광역자치단체, 박홍근 의원실 취합

5월 중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가구 단위로 세대주에게 지급되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었다. 5월 13일부터 지급이 되었고, 8월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소지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사용 업종에 제한이 있어서, 백화점,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 즈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상반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중앙정부 14조 2,357억 원, 지자체 3조 3,355억 원으로 총 17조 5,712억 원

이다. 일인당 약 34만 원에 해당한다(표 3-1 참조).

세종, 충북, 울산, 부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 제주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불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26.4만 원부터 48.8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대체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합친 지원금액이 큰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월 중순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카드 지출액)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한 전체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음 2절에서는 분석에 사용하는 카드 지출액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카드 지출액 자료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소비 지출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유용하다. 3절에서는 분석 방법과 기초 통계를 제시한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따라 시기를 5개로 나누고, 2019년과 2020년 카드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효과를 추정한다. 4절에서는 추정 결과를 보고하고, 5절에서는 결과를 해석한다. 6절에서는 결과를 요약한다.

제2절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2019년과 2020년 카드 일별 사용액이다. 분석에 사용하는 A카드 자료는 A카드의 이용액을 A카드의 시장 점유율로 나눈 것으로, 전체 카드 이용액에 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19년 국민계정에서 국내 총소비액은 약 897조 원이고, 카드지출액은 약 778조 원이다. 카드 사용액이 총소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8%이다. 이 비중은 2006년 71.4%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하는 카드 지출액은 일별 자료이기 때문에 코

로나19의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일어난 일자를 기준으로 코로나와 정부 정책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월별, 분기별, 연간 자료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일별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카드 지출액 자료에는 품목별, 지역별로 상세한 통계가 있어서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표 3-2, 그림 3-1 참조).

〈표 3-2〉 국민계정 소비액과 카드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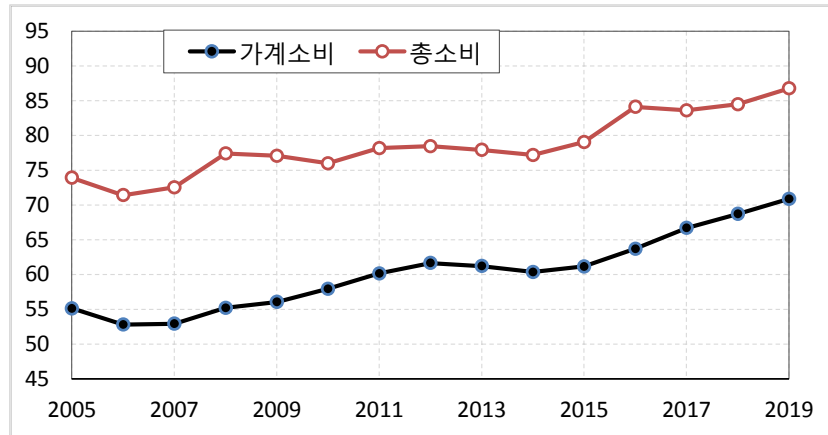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연도	소비지출액		카드지출액		비중(%)	
	가계소비 (1)	총액 (2)	개인이용 금액(3)	지출총액 (4)	가계소비 (3)/(1)	총소비 (4)/(2)
2004	449,483	456,886	269,164	352,506	59.9	77.2
2005	478,667	488,042	263,828	360,699	55.1	73.9
2006	507,043	519,431	267,785	370,959	52.8	71.4
2007	541,970	556,349	286,822	403,632	52.9	72.6
2008	578,000	589,654	319,069	456,421	55.2	77.4
2009	596,115	605,170	334,216	466,358	56.1	77.1
2010	638,077	649,706	369,703	493,736	57.9	76.0
2011	682,529	691,781	410,571	540,794	60.2	78.2
2012	706,576	716,113	435,584	561,858	61.6	78.5
2013	722,937	732,358	442,505	570,643	61.2	77.9
2014	746,287	754,025	450,469	581,964	60.4	77.2
2015	764,300	777,068	467,380	614,241	61.2	79.0
2016	790,431	803,432	503,532	675,762	63.7	84.1
2017	818,908	840,678	546,173	702,970	66.7	83.6
2018	857,075	877,428	589,002	741,320	68.7	84.5
2019	881,494	897,151	624,693	778,350	70.9	86.8

자료: 소비지출액: 국민계정, 카드지출액: 한국은행, 지급결제통계

〔그림 3-1〕 총소비와 가계소비에서 카드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분석 방법과 기초 통계

1.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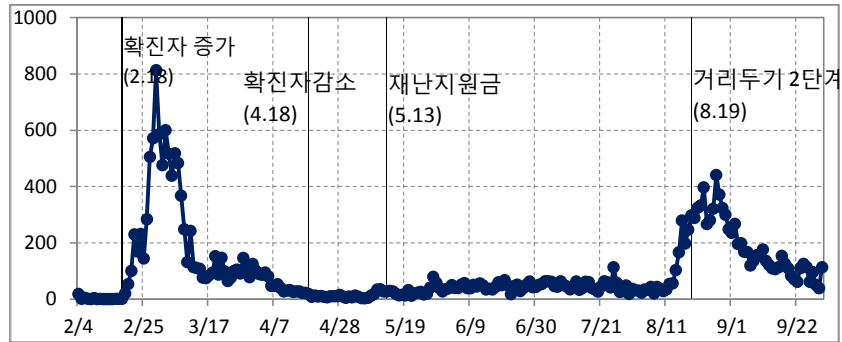
먼저, 분석을 위해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따라 시기를 크게 5개로 나눈다(그림 3-2, 표 3-3 참조).

1기는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2기는 2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시기이다. 이 때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이자, 코로나19의 영향이 온전히 나타나는 시기이다. 2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한다.

3기는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기간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림 3-2〕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



자료: 저자 작성.

〈표 3-3〉 시기 구분, 평가 대상, 비교 시기

시기	기간	특징	평가 대상	비교시기
1기	1월 1일~2월 18일	코로나 확산 이전		
2기	2월 19일~4월 17일	코로나 확산 시작	코로나-19	1기
3기	4월 18일~5월 13일	확진자 감소	거리두기 완화	2기
4기	5월 14일~7월 8일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3기
5기	7월 9일 이후		재난지원금	3기

자료: 저자 작성.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기간부터 8월 말까지를 두 기간으로 나눈다. 4기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이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많이 나타난 기간이어서, 이 기간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5기는 7월 9일부터 8월 말까지의 기간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완료된 기간이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거의 사라진 시기라고 예상된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2기와 확산되기 이전인 1기를 비교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한다. 확진자가 감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3기와 코로나가 확산된 2기를 비교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를 분석한다. 코로나 확산 때와 비교하여 거리두기 완화가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한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4기와 거리두기가 완화된 3기를 비교하여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4기와 2기를 비교하면,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4기와 3기를 비교하면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는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의 효과만을 파악할 수 있다. 5기와 3기를 비교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후반기의 효과를 분석한다.

평가 방법은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기와 1기를 비교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2020년 2기와 1기의 소비지출액 차이를 2019년 2기와 1기의 소비지출액 차이와 비교한다. 이중차분법은 공통 추세(parallel trend)를 가정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2020년 2기와 1기의 지출액 차이는 2019년 2기와 1기의 지출액 차이와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2019년 이전의 자료가 있었다면 연도별 지출액의 추이를 감안하여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해의 자료만 있어서 공통 추세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이면 $B_i = 1$ 이고, 2019년이면 $B_i = 0$ 이라고 하자. B_i 는 통상적인 이중차분법에서 집단 변수에 해당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사건의 시기를 $T_i = 1$ 이라고 하자. T_i 는 통상적인 이중차분법에서 시간 변수에 해당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할 때, 2기(2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면 $T_i = 1$ 이고, 1기이면 $T_i = 0$ 이다. 거리두기 완화를 평가할 때, 3기이면 $T_i = 1$ 이고, 2기이면 $T_i = 0$ 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평가할 때, 4기이면 $T_i = 1$ 이고, 3기이면 $T_i = 0$ 이다. 2020년이면서 평가 사건의 시기에 해당하면 $D_i = 1$ 이라고 하자. $D_i = B_i \times T_i$ 이다.

위와 같이 변수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한다.

$$\ln Y_i = \alpha + \beta T_i + \gamma B_i + \delta D_i + \epsilon_i \quad (3-1)$$

Y_i 는 i 일의 카드 지출액을 가리킨다. 회귀식에서는 일별 카드지출액에 로그값을 취한 변수를 종속 변수로 사용한다. 식 (3-1)을 회귀분석하

여 얻어진 δ 의 추정치가 평가 대상(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나타낸다. <표 3-3>에서 나타냈듯이, 평가 대상에 따라 포함되는 시기가 달라진다. 식 (3-1)에서 α 는 평가 대상 사건 이전 2019년도 평균 지출액을, β 는 시기 효과(time or aggregate effect)를, γ 는 2020년의 효과(group effect)를 가리킨다.

2. 추가로 통제집단을 설정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건(코로나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되, 2019년과 2020년의 카드사용액 추세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절에서는 추가로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업종을 추가적인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본다.

Kim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카드 지출액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서울주민과 비서울주민의 카드지출액을 구분하여 삼중차분법을 사용하였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지역 단위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서울 주민이 서울지역에서 사용한 카드지출액을 추가적인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하에서는 비서울주민을 비교 집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살펴본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 서울과 경기 두 지역만 있다고 하고, 각 지역 주민은 거주지 지역에서 300만 원, 비거주 지역에서 100만 원을 소비하고 있었다고 하자. 이제 각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각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지원금을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정된 것이 실제로 지역주민의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다.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어차피 300만 원을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100만 원으로 주거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200만 원을 주거 지역에서 더 소비할 것이다. 그러면 지원금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아무데서나 사용

할 수 있다. 지역을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이 원래 지역에서의 소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소비할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즉, 사용 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소비 선택 집합을 실제로 제한하지 못한다.

각 지역별 소비 비율대로 지원금을 지출한 경우(상황 1)가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지원금 가운데 80만 원을 소비하되, 60만 원은 거주 지역에서, 20만 원은 비거주 지역에서 소비한다. 각 지역 주민들은 지원금 가운데 80만 원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소비 효과는 80%이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서울주민이 소비한 금액에서 경기 주민이 소비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측정하면 40만원(=60-20만 원)이 된다. 다시 말해, 실제 소비효과는 80%인데, 차이로 측정하면 40%가 된다.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이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하였을 경우(상황 2)가 <표 3-5>에 나와 있다. 재난지원금 100만 원 가운데 총 80만 원을 소비

<표 3-4> 지원금 지급과 지역별 소비지출의 관계 : 상황 1

(단위: 만 원)

	지원금 지급 이전 소비지출		100만 원 지원금 지급 소비지출 증가액		소비효과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주민	300	100	+60	+20	+80
경기주민	100	300	+20	+60	+80
차이			+40		

주: 저자 작성.

<표 3-5> 지원금 지급과 지역별 소비지출의 관계 : 상황 2

(단위: 만 원)

	지원금 지급 이전 소비지출		100만 원 지원금 지급 소비지출 증가액		소비효과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주민	300	100	+70	+10	+80
경기주민	100	300	+10	+70	+80
차이			+60		

주: 저자 작성.

한 것은 상황 1과 같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거주 지역에서 70만 원을 사용하고, 비거주지역에서 1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자. ‘꼬리표 효과’가 다소 작동한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소비 효과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80만 원인데, 차분을 사용하면 60만원(=70-10만 원)으로 측정된다. 꼬리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분을 할 경우 실제 효과를 과소 측정하게 된다.

‘꼬리표 효과’가 완전하지 않은 한 서울주민과 비서울주민의 소비지출액을 차감하는 방법은 항상 소비효과를 과소 측정하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거주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비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소비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전국 단위로 지원금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의 소비 패턴과 상관없이 소비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된다.

<표 3-6>에서는 상황 1의 경우를 보여준다. 각 지역에서 소비지출 증가액을 합하면 서울지역 80만 원, 경기지역 80만 원이다. 이를 합하면 전국적으로 소비지출 증가액은 160만 원이고, 이는 전국단위로 지급한 지원금 200만 원의 80%에 해당한다(상황 1-1).

약간의 꼬리표 효과가 있는 상황 2의 경우, 각 지역에서 소비지출 증가액을 합하면 역시 각각 80만 원이 된다(표 3-7 참조). 각 지역에서의 소비지출 증가액을 합하면 소비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더하기 문제를 빼기 문제라고 오해하면 실제 효과를 항상 과소측정한다.

<표 3-6> 지원금 지급과 지역별 소비지출의 관계: 상황 1-1

(단위: 만 원)

	지원금 지급 이전 소비지출		100만원 지원금 지급 소비지출 증가액		소비효과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주민	300	100	+60	+20	+80
경기주민	100	300	+20	+60	+80
합	400	400	+80	+80	+160

주: 저자 작성

〈표 3-7〉 지원금 지급과 지역별 소비지출의 관계 : 상황 2-1

(단위: 만 원)

	지원금 지급 이전 소비지출		100만 원 지원금 지급 소비지출 증가액		소비효과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주민	300	100	+70	+10	+80
경기주민	100	300	+10	+70	+80
차이			+80	+80	+160

주: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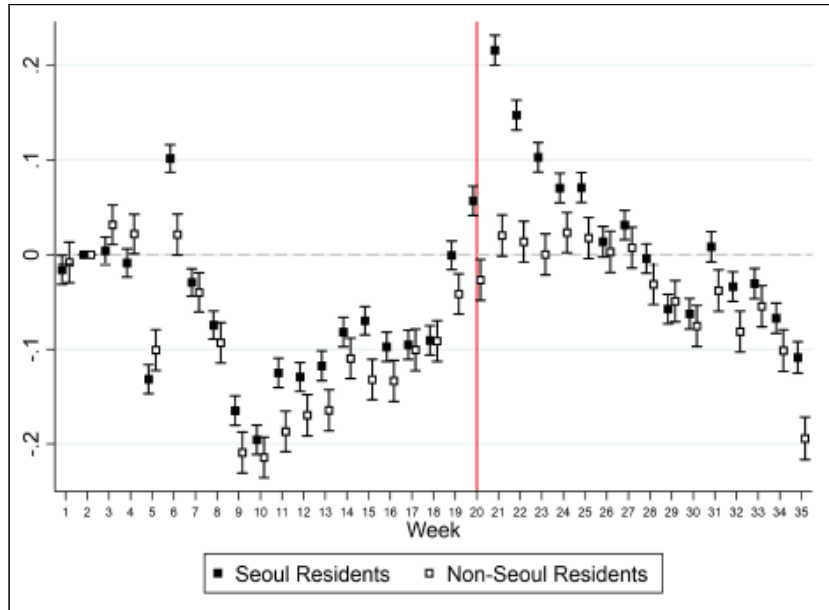
전국단위 자료가 있을 경우 전국의 소비지출 증가액을 모두 합하여 지원금 지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지원금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서울지역 자료만 있는 경우라면 서울지역의 소비지출 증가 총합을 지원금 지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된다. 서울지역만 대상으로 측정한 경우, 해석은 ‘지원금 지원이 서울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이 된다.

[그림 3-3]은 Kim et al.(2020)에서 추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서울지역에서 서울주민과 비서울주민의 소비지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림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1)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서울주민과 비서울주민의 소비지출이 모두 증가하였고, (2) 서울지역에서 서울주민의 소비가 비서울주민의 소비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두 번째 사실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꼬리표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6주 후부터는 서울주민과 비서울주민의 소비액이 거의 비슷한데, 이는 꼬리표 효과가 6주 후부터 사라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서울주민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비서울주민의 소비도 증가하였다. 소비 효과를 올바르게 측정하는 방법은 서울지역에서의 소비 증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서울주민과 비서울주민의 소비를 구분하지 않고, 서울지역에서 소비지출 증가액을 20주 전후로 비교하면 서울 지역에서 7주 동안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약 10% 이상인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서울지역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비교하면 지급액의 약 75% 정도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Kim et al.(2020)의 연구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이중차분으로 추정한 결과



자료: Kim et al.(2020: 20), Figure 2.

지원금의 사용처를 업종으로 한정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지원금 지급 이전에 마트와 백화점에서 각각 300만 원, 1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하면서 백화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백화점 소비는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마트에서 300만 원 소비하여 왔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마트에서 소비하면, 나머지 내 계좌의 금액 100만 원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용처를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마트에서 60만 원을 추가 사용하고, 백화점에서 20만 원을 추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소비 효과는 총 80만 원이다.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마트의 소비 증가액에서 백화점의 소비 증가액을 차감하면 40만 원으로 소비효과를 과소 측정하게 된다(표 3-8의 상황 1 참조). 약간의

〈표 3-8〉 지원금 지급과 업종별 소비지출의 관계

(단위: 만 원)

	지원금 지급 이전 소비지출		100만 원 지원금 지급 소비지출 증가액		소비효과
	마트	백화점	마트	백화점	
상황 1	300	100	+60	+20	+80
상황 2	300	100	+70	+10	+80
상황 3	300	100	+80	0	+80

주: 저자 작성

꼬리표 효과가 있으면 마트에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여전히 소비효과를 과소 측정한다. 꼬리표 효과가 완전한 경우(상황 3)에서만 차감하는 방식이 소비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 꼬리표 효과가 있던 없던, 각 업종에서의 소비지출 증가액을 합하면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 80만 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식은 사용 지역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소비지출 증가액을 모두 더하는 것이다. 차감하면 실제 소비효과를 항상 과소 평가한다.

위에서 서울주민과 비서울주민을 다른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서울주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위에서 측정한 것은 차이만을 보여준다. 정책 평가에서는 한 집단에 대한 정책 처방이 다른 집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집단 i 에 대한 정책 처방이 집단 i 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정책 처방 안정성(stable unit treatment value assumption; SUTVA)이라고 한다(Angrist, Imbens, and Rubin, 1996). 정책처방 안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책 평가 결과가 왜곡된다.

요약하면, 재난지원금의 사용 지역과 업종을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의 사용 방식을 완전히 제한하지 못한다. 재난지원금의 사용 지역과 업종이 완전하게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나 업종을 추가적인 통제 집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이나 업종을 넘나들면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

고 소비지출 증가액을 합산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이 올바르다. 더하기로 추정해야 하는데 빼기를 하여 계산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항상 과소 평가하게 된다.

3. 다른 정부정책의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정부는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하였다.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 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 동안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였다. 쿠폰으로 지급된 금액이 재난지원금만큼 큰 금액이다.

아동돌봄쿠폰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어떻게 겹쳐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점이 중요하다. 아동돌봄쿠폰은 4월부터 7월까지 월별로 지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5월 13일을 기준으로 전후 소비액을 비교한다. 아동돌봄쿠폰의 지급 시기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과 이후에 두 달씩 분포된다.

이철희(2020)의 연구에 따르면, 쿠폰 사용이 가능한 첫 번째 주에 가장 소비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이후 5주 동안 효과가 집중되었다. 아동돌봄쿠폰의 소비 효과가 재난지원금 지급일인 5월 13일 이전에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5월 13일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면, 아동돌봄쿠폰 때문에 재난지원의 소비효과를 오히려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는 3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자료에서도 4월 이후 자동차 판매에 대한 카드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자동차 판매 증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라기보다는 소비세 감면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기초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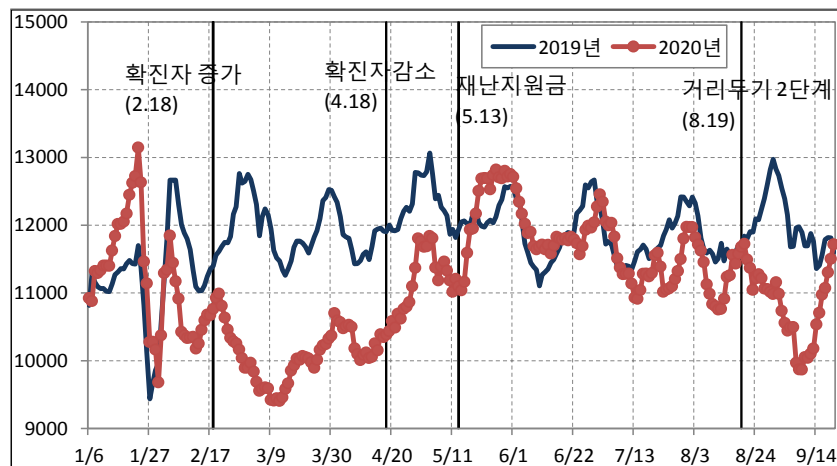
[그림 3-4]는 2019년과 2020년 일별 카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인 1기(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시기이다. 설 연휴 때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설날이 2019년에는 2월 5일이었고, 2020년에는 1월 25일이었다. 설 연휴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1월과 2월 중순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설정하여 보면, 1기 동안 두 해의 카드지출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중차분법에서의 공통 추세 가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기(2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에는 2020년 카드지출액이 2019년에 비해 15.4% 감소하였다. 이 차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림 3-4] 2019년과 2020년 A카드 매출액

(단위: 억 원)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표 3-9> 시기별 A카드 평균 지출 금액

(단위: 억 원)

	2019년 (1)	2020년 (2)	차이 (2)-(1)
1기	1,117.9 (28.1)	1,113.5 (31.6)	-4.4 (42.2)
2기	1,193.7 (17.7)	1,011.6 (17.9)	-182.1 (25.1)**
3기	1,224.7 (27.4)	1,118.3 (32.8)	-106.4 (42.7)*
4기	1,196.7 (18.6)	1,205.6 (18.6)	8.9 (26.3)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3기(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2020년 카드지출액이 2019년에 비해 8.9% 감소하였다. 2기와 비교하면 2020년과 2019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전반기 시기인 4기(5월 14일부터 7월 8일)에 2020년과 2019년 카드 지출액의 차이가 0.7%이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4기에는 2020년 카드지출액이 2019년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2020년 카드지불액이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추정 결과

식 (3-1)을 추정한 결과가 <표 3-10>에 나와 있다. 2기를 1기와 비교하여 코로나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코로나의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0.16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16.3% 감소하였다. 3기를 2기와 비교하여 추정한 결과,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7.3% 증가하였다. 4기를 3기와 비교하여 추정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하였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16.3% 감소하였는데 6월부터는 소비지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소비지출 회복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41.2%, 재난지원금은 58.8% 기여하였다.

재난지원금의 동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주 단위로 나눈 평가 대상 시기 변수를 포함하여 식 (1)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계수값을 <표 3-11>로 제시하였고, 이를 [그림 3-5]로 표현하였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급 초기에 높게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2주 지난 5월 5주째에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15.6%까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후 13주

〈표 3-10〉 추정 결과

변수	(1)	(2)	(3)
코로나의 영향	-0.163* (0.049)		
거리두기 완화		0.073 (0.046)	
재난지원금			0.104* (0.044)
집단효과	-0.007 (0.036)	-0.170* (0.026)	-0.096* (0.036)
시간효과 2기	0.078* (0.035)		
시간효과 3기		0.026 (0.033)	
시간효과 4기			-0.024 (0.031)
포함된 시기	2기, 1기	3기, 2기	4기, 3기
관측치	215	170	164
R^2	0.111	0.257	0.052

주: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임. *는 5% 범위에서 유의함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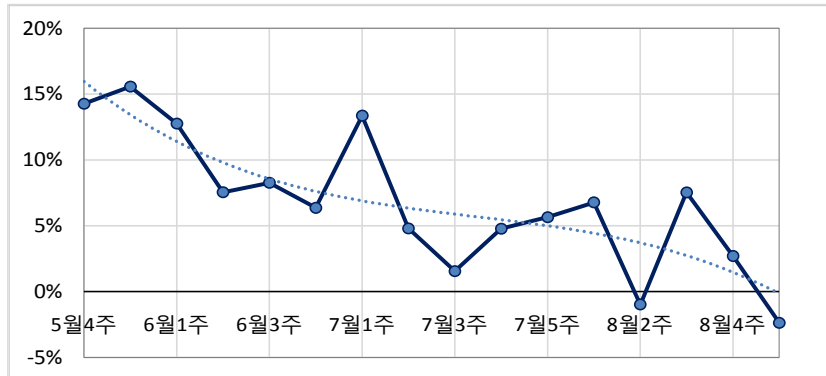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표 3-11〉 재난지원금의 동태적 효과

시기	경과 시기(주)	계수값	표준오차	t값
5월 4주	1	0.143	0.067	2.130
5월 5주	2	0.156	0.067	2.320
6월 1주	3	0.128	0.067	1.900
6월 2주	4	0.075	0.067	1.130
6월 3주	5	0.083	0.067	1.230
6월 4주	6	0.064	0.067	0.950
7월 1주	7	0.134	0.067	1.990
7월 2주	8	0.048	0.067	0.720
7월 3주	9	0.016	0.067	0.230
7월 4주	10	0.048	0.067	0.710
7월 5주	11	0.056	0.067	0.840
8월 1주	12	0.068	0.067	1.010
8월 2주	13	-0.010	0.067	-0.150
8월 3주	14	0.075	0.067	1.120
8월 4주	15	0.027	0.067	0.400
8월 5주	16	-0.024	0.075	-0.320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그림 3-5〕 재난지원금의 동태적 효과



주: 점선은 추세를 가리킴.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가 지난 8월 두 번째 주 정도에는 계수값이 0에 가까워졌다. 재난지원금 지출의 마감이 가까워진 8월 3주에는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료를 지역단위로 나누고, 지역별로 추정식 (3-1)을 사용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계수값에 100을 곱하여 퍼센트로 나타낸 결과가 [그림 3-6]에 나와 있다. 추정 계수값과 표준오차는 <부표 3-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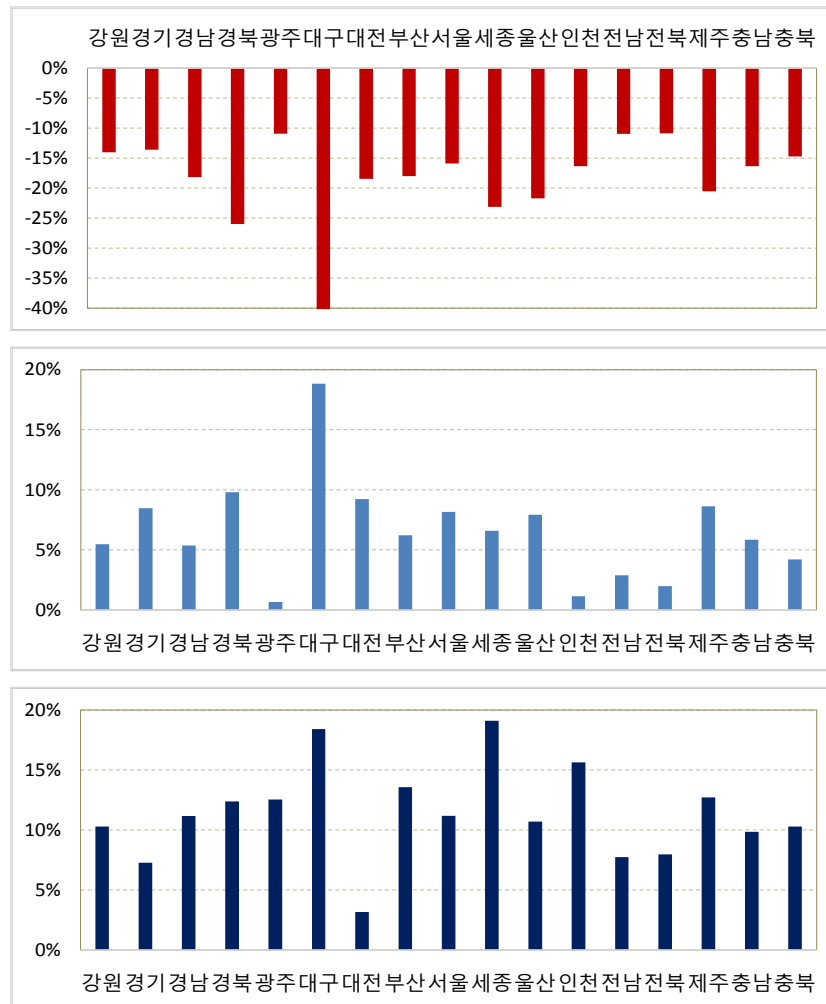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지역의 소비지출이 감소하였다. 소비지출이 많이 감소한 지역은 대구(-40.2%), 경북(-26.0%), 세종(-23.2%)이었다. 광주(-10.9%), 전남(-11.0%), 전북(-10.9%)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지출 감소가 적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15~20% 정도 소비지출이 감소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모든 지역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 소비지출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18.8%), 경북(9.8%), 대전(9.2%)이었다. 광주(0.7%), 인천(1.1%), 전북(2.0%), 전남(2.9%)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지출 증가의 효과가 적었다. 당연하게도, 코로나19로 소비지출이 많이 감소한 지역에서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 점은 잠

시 뒤에 다시 살펴본다.

재난지원금도 모든 지역의 소비지출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큰 지역은 세종(19.1%), 대구(18.4%), 인천(15.6%)이었다. 상대적으로 소비 증가 효과가 적은 곳은 대전(3.2%), 전남(7.7%), 전북(8.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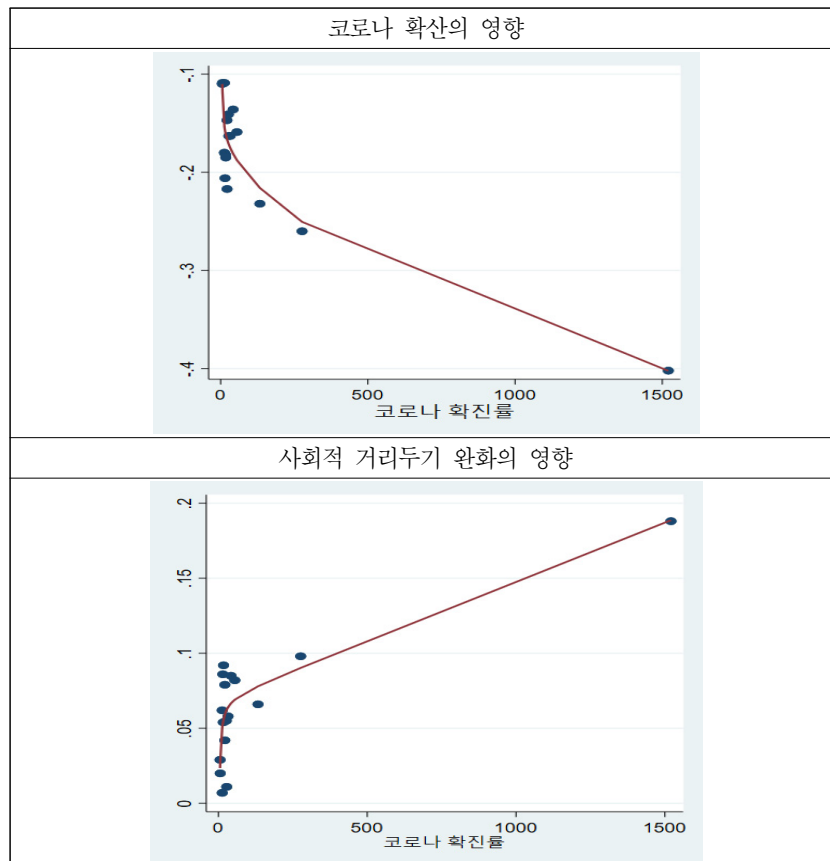
[그림 3-6] 코로나19(상), 거리두기 완화(중), 긴급재난지원금(하)이 지역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



주: 추정 계수값, 표준오차는 <부표 3-1>에 있음.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재난지원금의 액수와 소비지출 효과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 대구와 세종은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큰 두 지역이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지출 효과가 작았던 지역은 대전, 전남, 전북인데, 이 세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지불되었다.

(그림 3-7)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율과 소비지출액,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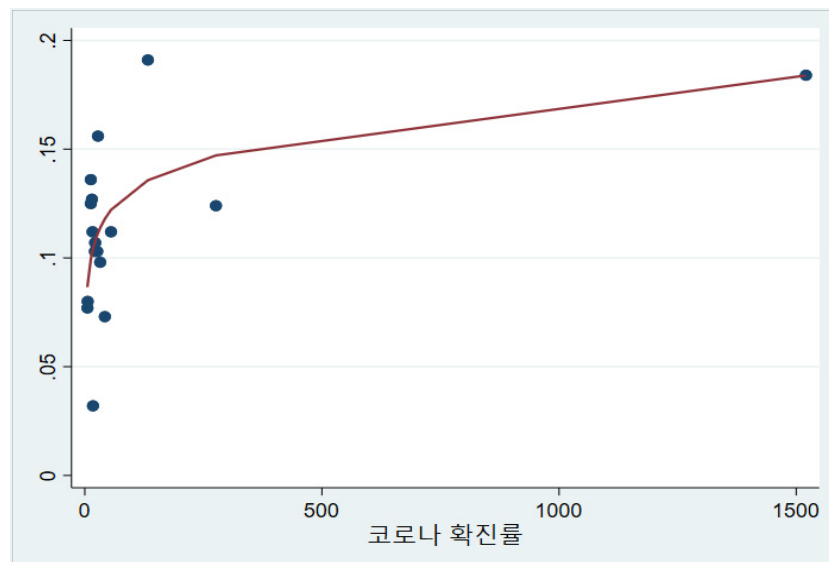
주: y축은 소비지출액 효과임. 각 점은 지역을 가리킴. 코로나19 확진율은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임. 선은 local polynomial smoothing을 이용한 것임.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지역별 효과와 코로나19 확진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확진율은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이다. [그림 3-7]에서 나타나듯이,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당연히 소비지출이 감소하였다. 지역 코로나19 확진율과 지역 소비지출액의 상관계수는 -0.86 이다.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액이 많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진율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소비에 미친 효과의 상관계수는 0.79 이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역별로 골고루 나타났다. 확진율과 재난지원금 효과의 상관계수는 0.50 으로 다른 상관계수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구, 경북, 세종과 같이 확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액이 많이 감소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지출액이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 확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컸지만 코로나의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고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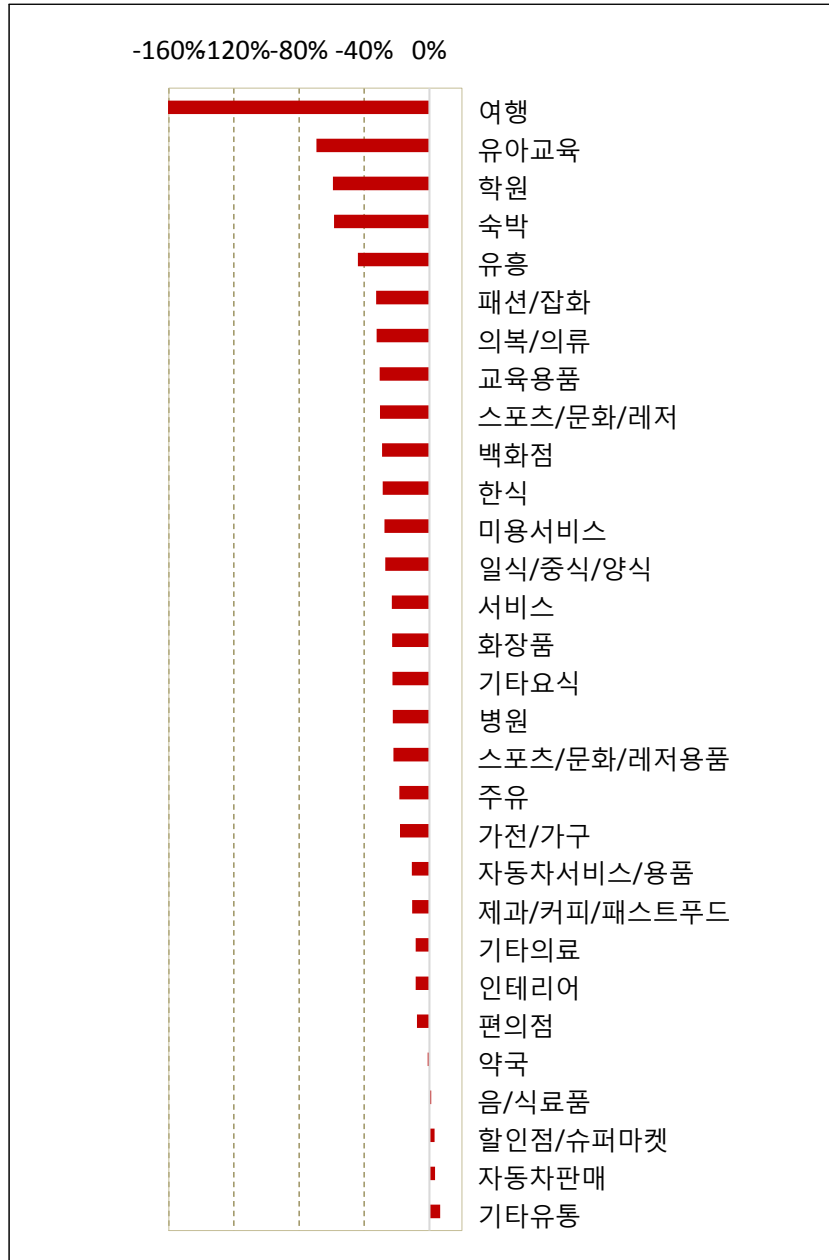
[그림 3-8]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율과 재난지원금 효과의 관계



주: y축은 소비지출액 효과임. 각 점은 지역을 가리킴. 코로나 확진율은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구 백만명당 확진자 수임. 선은 local polynomial smoothing을 이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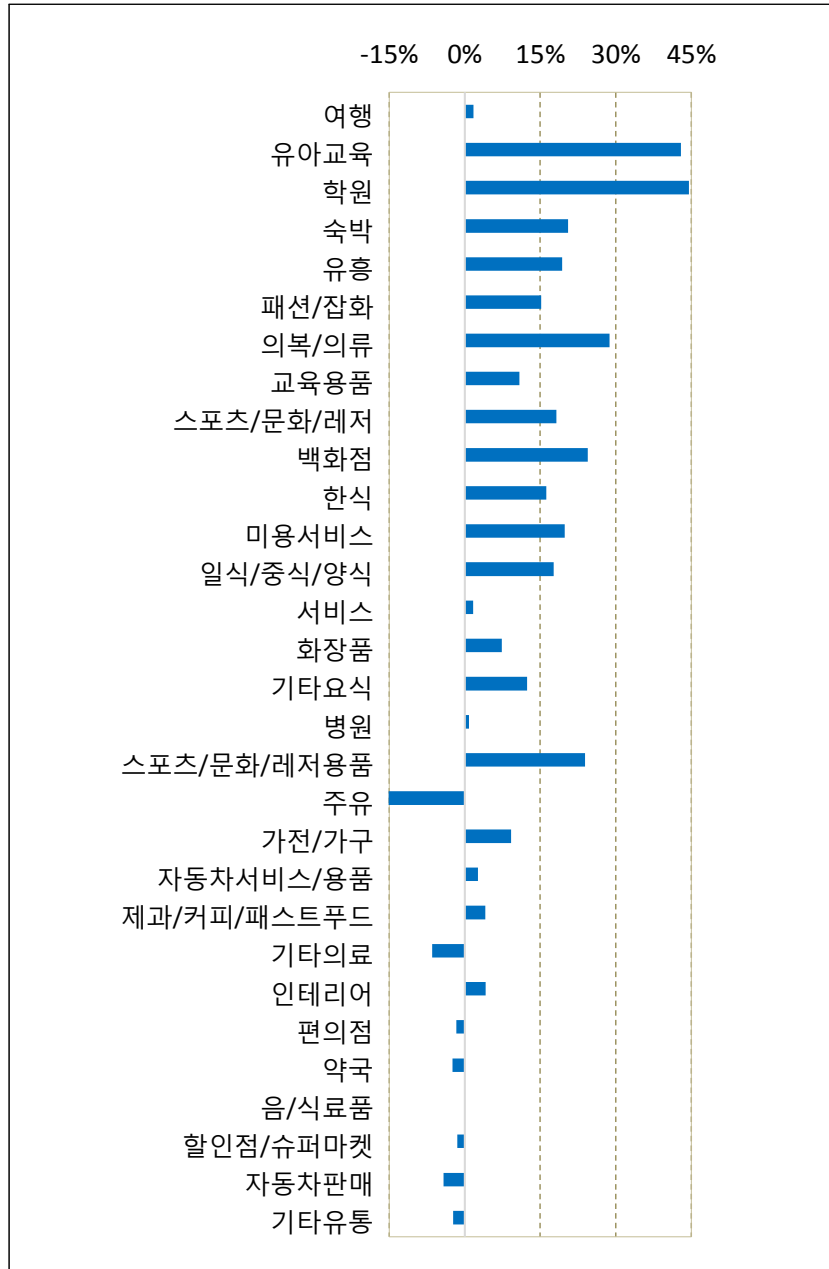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그림 3-9] 코로나19와 거리두기 완화가 업종별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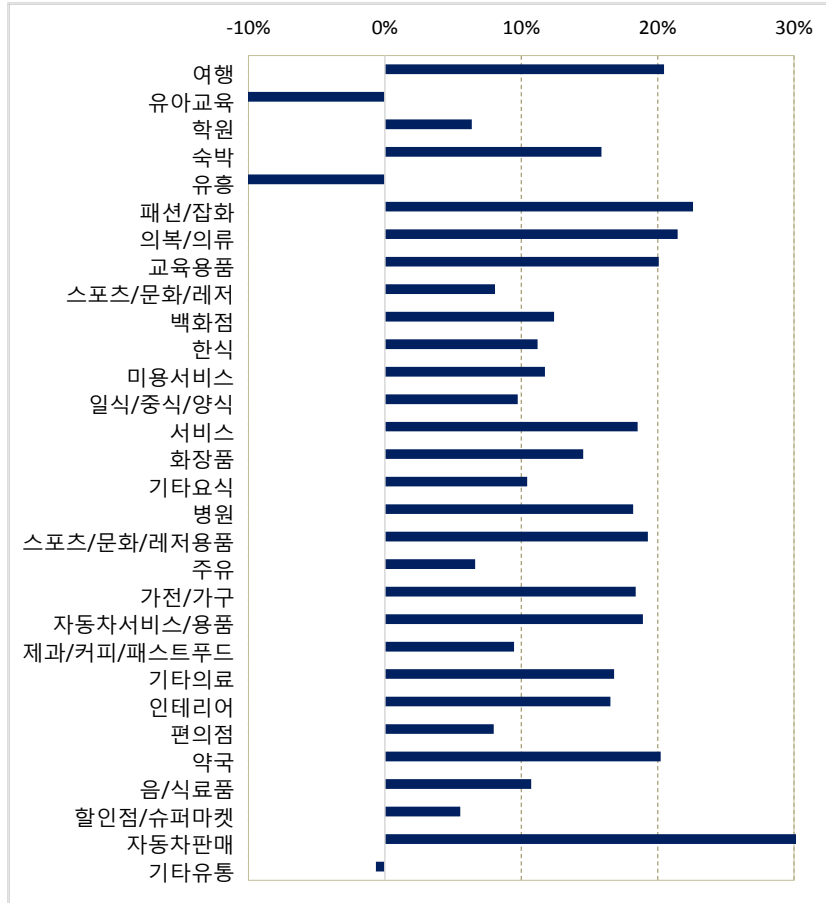
주: 추정 계수값, 표준 오차는 <부표 3-2>에 있음.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그림 3-10〕 거리두기 완화가 업종별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주: 추정 계수값, 표준오차는 <부표 3-2>에 있음.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그림 3-11]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주: 추정 계수값, 표준 오차는 <부표 3-2>에 있음.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액에 미친 영향을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3-9]는 소비지출이 많이 감소한 품목부터 순서대로 코로나19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온 수치는 식 (3-1)을 품목별로 추정한 계수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여행(-160.4%)이다. 다음으로는 유아교육(-69.3%), 학원(-59.2%), 숙박(-58.4%), 유흥(-43.8%)에서 소비가 많이 감소하였다. 반

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은 품목도 있다. 자동차 판매(3.4%), 할인점/슈퍼마켓(3.4%), 음식료품(1.1%)의 소비액은 늘어났다. 약국, 편의점 등도 영향을 적게 받았다.

[그림 3-10]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 나타나 있다. 유아교육(42.9%), 학원(44.5%), 숙박(20.5%), 의복(28.8%) 등에서 소비지출 증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대체로 보면, 여행을 제외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많이 감소한 품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여행은 여전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림 3-11]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컸던 품목은 패션/잡화(22.5%), 의복/의류(21.5%), 여행(20.5%), 약국(20.2%), 교육용품(20.1%)이다.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품목에 따라 10~20% 수준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흥업 소비는 재난지원금 사용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꼬리표 효과가 작동하여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동차 판매는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3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의 효과와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은 효과가 음(-)으로 나타났는데, 표준오차가 매우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에 대해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어렵다.

제5절 결과에 대한 해석

1. 한계소비 성향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은 54일 동안 +10.4%이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한계소비 성향을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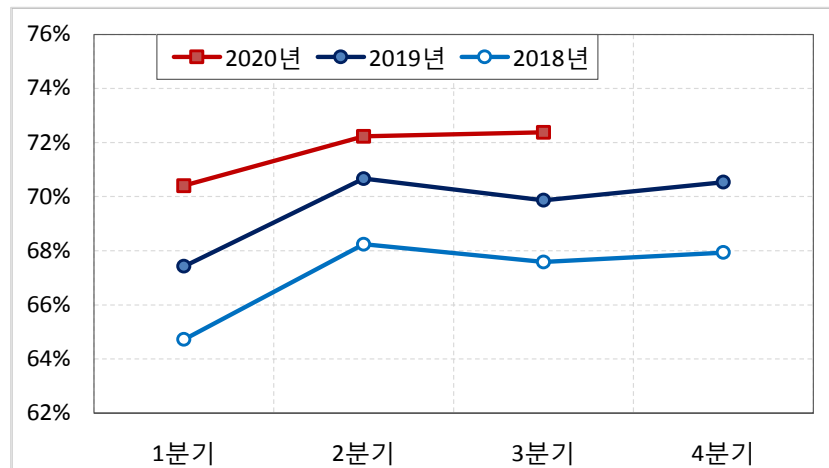
국민계정 2분기 가계지출은 총 210.6조 원이다. 재난지원금이 없었을

경우의 가계지출액을 B 라고 하면, $B(1+0.104)(54/90)=210.6$ 조 원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 효과(54일 동안 +10.4%)가 없었다면, 가계지출은 총 198.2조 원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소비 효과는 총 13.6조 원이 된다. 이 기간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총 17.6조 원이므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0.704(=13.6/17.6)$ 이다. 8월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면 소비 효과는 평균 6.8%이고, 이 경우 한계 소비성향은 0.762이다.

이러한 계산은 카드지급액의 변화가 소비 변화를 잘 대표한다는 가정 에 기반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카드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카드사용액 이 평소보다 늘었다면 카드사용액 자료가 소비지출을 과대 대표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 개인카드 사용 액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보통 2분기 카드사용 비중은 1분기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런데 2020 년 2분기와 1분기 카드사용 비중의 차이는 2019년이나 2018년에 비해 작 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서 소비지출액 중 카드사용 비중이 높아 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분기 카드사용액 정보가 실제 소비지출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3-12 참조).

[그림 3-12] 카드사용액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가계소비지출은 국민계정. 카드사용액은 한국은행 지급결제통계임.

2. 가계동향조사에서의 한계소비성향

위에서는 카드 사용액 자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여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0.704~0.762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러한 추정 결과가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의 결과와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로 보면, 공적이전소득이 2019년에는 월별로 큰 차이가 없다가 2020년 4월에는 조금 증가 하였고, 5월에는 크게 증가하였다(부도 2-1 참조). 4월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였고, 5월에는 전국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6월에는 공적이전액이 작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5월에 집중되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고, 이후 경제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까지의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큰 변화가 없었다가, 5월에 크게 증가하였다(부도 2-2 참조). 한편, 가구 소비는 4월까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5월에 크게 증가하였고, 6월에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5월에 집중되었고, 소비는 6월까지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별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달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월과 2월은 코로나가 확산하기 이전의 시기이고, 3월과 4월은 코로나가 확산된 시기이고, 5월과 6월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소비가 늘어난 시기로 구분된다. 5~6월에 나타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3~4월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4월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두 달씩 묶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공적이전과 소비지출의 효과를 약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3~4월과 비교하여 5~6월에 기초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은 +1.6만 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부표 2-2 참조). 이 시기에 공적이전소득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26.3만 원 증가하였다. 그 결과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은 30.3만 원 중

가하였다. 3~4월과 비교하여 5~6월에 소비지출은 21.3만 원 증가하였고, 비소비지출은 9.3만 원 증가하였다. 이 둘을 합한 총지출은 30.6만 원 증가하였다.

두 달 사이의 소비지출 증가액이 21.3만 원이므로, 경상소득 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계소비 성향은 $0.704(=21.3/30.3)$ 이고, 공적이전소득 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계소비성향은 $0.810(=21.3/26.3)$ 이다.

3~4월과 비교하여 5~6월에 비소비지출은 9.3만 원 증가하였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세금이 4.8만 원, 가구 간 이전이 3.6만 원, 이자가 0.5만 원 증가하였다.

이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지원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아도 2020년에 가계부채는 증가하였다. 가계부채 총액도 증가하였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증가하였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참조). 저축액(소득-지출)은 이 기간 동안 3천 원 감소하였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로 파악한 것을 요약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지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비소비지출(특히 세금과 사적이전 지출)에 사용하였다. 저축을 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카드사용액 자료로 추정한 결과와 일치한다.

3. 관련 연구

대규모 현금 보조금 지급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가운데 일부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미국에서 2008년 세금 환급의 형태로 현금을 지급한 것을 연구한 Parker et al.(2013)에서는 지급액의 50~90%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Coibion et al.(2020)에서는 미국에서 2020년 3월 CARES 법안에 따라 현금을 지급(성인 1인당 120\$, 자녀 50\$)하는 정책을 검토하였다. 미국 19,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지급액의 40%를 지출하였다. 지급액의 30%는

저축에, 30%는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일본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1인당 10만 엔을 보편 지급한 정책을 평가한 Kubota.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지급액의 약 49%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현금 지급에 대해 소비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Baugh et al.(2020)의 연구가 있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예상된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소비를 증가시키고, 예상된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 저자들은 이러한 비대칭적인 소비 행태가, 저마다 다른 돈주머니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Mental Accounting과 부합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예상된 소득 증가에 해당하고, 사람들은 예상된 소득 증가를 일종의 보너스 처럼 생각해서 상당 부분을 소비지출에 사용한다.

제6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카드 지출액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따라 시기를 나누고, 2019년과 2020년 카드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16.3% 감소하였다.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7.3% 증가하였고, 5월 중순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소비지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급 초기에 높게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2주 지난 5월 5주째에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15.6%까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여 8월 두 번째 주 정도에는 계수값이 0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소비 감소 폭이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도 컸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행, 교육, 숙박, 유흥에서 소비가 많이 감소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업종들에서 소비가 많이 증가하였다. 코로나가 소비에 미친 영향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다. 반면,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품목에 따라 10~20% 수준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지출에 나머지는 비소비지출(세금, 사적이전 지출)에 사용되었다. 저축이나 부채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현금 지원금은 용도나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 2020년 상반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용도와 사용기간을 한정하였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용도와 기간 한정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지만, 또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소비지출 형태를 자료로 보면, 용도와 기간 한정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 사용 기간을 한정하여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저축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소비지출 효과가 클 수 있었다.

보편 지급인가 선별 지급인가에 따라 소비지출 효과가 달라지는가는 소득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얼마나 다른가에 달려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비성향이 저소득층에서 다소 높다는 연구도 있지만, 『가계동향조사』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한다. 보편/선별 지급을 둘러싼 논의가 실제 효과의 크기와 괴리되어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들은 지원금을 소비지출, 저축, 부채상환 등 여러 가지 용도로, 가장 필요한 곳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설사 소비지출에 대한 사용이 적다고 하더라도, 부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저축을 하여 미래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지원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지출 효과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의 한 부분이다.

제4장 결 론

제1절 요약

감염병의 확산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가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면 가구의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지출 규모가 감소한다. 대면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는 매출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취약 집단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가구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소비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긴급 보조금을 편성, 지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확산 및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가구 경제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정부 보조금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완화 과정 및 정부와 사회의 대응에 기초하여 2020년 상반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가구 소득, 지출 변화를 2019년의 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은 가구 소득을 4.4%, 지출을 11.1% 감소시켰다. 감염병의 확산은 소득보다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가구 소득이 8.1%, 지출이 12.4% 증가하였다. 소득과 지출 모두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가구 소득의 감소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관측되었지만, 저소득 가구는 근로소득 감소가, 고소득 가구는 사업소득 감소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1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서 소득 감소보다 지출의 감소가 더 크게 관측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는 소득 변화가 없이도 직접적으로 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 소득과 지출이 증가하였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과 지출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편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보조금의 지급은 지출 변화가 작은 1분위 가구에서도 다른 분위와 비슷한 방향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3장에서는 카드 지출액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따라 시기를 나누고, 2019년과 2020년 카드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16.3% 감소하였다.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7.3% 증가하였고, 5월 중순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소비지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급 초기에 높게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2주 지난 5월 5주째에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15.6%까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여 8월 두 번째 주 정도에는 계수값이 0에 가까워졌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증가한 소득의 70~80%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세금과 사적이전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 저축이나 부채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소비 감소 폭이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도 컸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행, 교육, 숙박, 유흥에서 소비가 많이 감소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업종들에서 소

비가 많이 증가하였다. 코로나가 소비에 미친 영향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다. 반면,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품목에 따라 10~20% 수준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제2절 정책 제언

이 보고서에 담은 두 편의 연구는 각기 다른 분석자료를 이용했지만, 공통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구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가,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두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위축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관측되었지만, 소득은 저소득 가구에서 지출은 고소득 가구에서 더 많이 감소하였다. 감염병 확산이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회복 추이가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소득 보전에 있는지, 혹은 소비 활성화에 있는지에 따라 정책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저소득 분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코로나19에 대응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의 두 측면 모두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둘째, 2020년 상반기의 가구 소비 지출 회복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보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더 크게 확인되었다. 다만, 사용된 정부 지출 규모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또는 완화는 보조금 지급에 비해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작은 수단이다. 재정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셋째, 사용 기한이 제한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소비지출을

높이는 효과가 바로 관측되었고, 지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 가구의 지출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용도 제한 역시 지출 형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앞으로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었던 2020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가구의 경제적 변화 정도를 추정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로 연 단위로 생산되는 패널자료들로는 직전에 발생한 단기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어렵다. 정부 보조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행정자료, 매월 조사가 이뤄지는 가구/개인 단위 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 관련 연구들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선(2020), 「코로나 위기와 6월 고용동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3, pp.1~23.
- 박종규(2008), 「경제위기와 소비패턴의 변화」, 『주간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17(50), pp.3~7.
- 손연정 · 강동우 · 정성미(2019),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 오삼일 · 이상아(2020),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BOK 이슈노트』 2020-9호, pp.1~12.
- 이현주 · 강신욱 · 김현경 · 이병희 · 주상영 · 전지현(2016), 『저소득층 가구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희(2020), 「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미발간 원고.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http://www.kobis.or.kr>).
- 통계청(2020),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 보도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 _____, 「월별 고용동향」.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Angrist, J., G. Imbens, and D. Rubin(1996), "Identification and Causal Effect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1, pp.444~455.
- Baker, S. R., R. A. Farrokhnia, S. Meyer, M. Pagel, and C. Yannelis(2020), "How Does Household Spending Respond to an Epidemic? Consumption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 w26949, pp.1~34.
- Baugh, B., I. Ben-David, H. Park, and J. Parker(2020), “Asymmetric Consumption Smoothing,” Fisher College of Business Working Paper No. 2013-03-20, pp.1~51.
- BEA(2020), “Personal Income and Outlays, September 2020”
- Benito, A.(2006), “Does Job Insecurity Affect Household Consumption?”, *Oxford Economic Papers* 58(1), pp.157~181.
- Bounie, D., Y. Camara, and J. Galbraith(2020), “Consumers’ Mobility, Expenditure and Online-Offline Substitution Response to COVID-19: Evidence from French Transaction Data”, *CIRANO Working Papers* 2020s-28, CIRANO, pp.1~53.
- Chen, H., W. Qian, and Q. Wen(2020),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Consumption: Learning from High Frequency Transaction Data”, Available at SSRN 3568574, pp.1~51.
- Chetty, R., J. N. Friedman, H. Nathaniel, S. Michael, and The Opportunity Insights Team.(2020), “How Did COVID-19 and Stabilization Policies Affect Spending and Employment? A New Real-Time Economic Tracker Based on Private Sector Data”, *NBER Working Paper* No. 27431.
- Coibion, O., Y. Gorodnichenko, and M. Weber(2020), “How did U.S. Consumers use their Stimulus Payments?”, working paper.
- ILO(2020),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Sixth edition.
- Kim, S., K. Koh, and W. Lyoo(2020), “Spending Impact of COVID-19 Stimulus Payment: Evidence from Card Transaction Data in South Korea”, Available at SSRN 3701676, pp.1~28.
- Kubota, S., K. Onishi, and Y. Toyama(2020), “Consumption responses to COVID-19 payment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and bank account data”, *Covid Economics* 62.
- Lozza, E., C. Libreri, and A. C. Bosio(2012), “Temporary employment, job insecurity and their extraorganizational outcomes”,

-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34(1), pp.89~105.
- Malley, J. and T. Moutos(1996), "Unemployment and Consumption",
Oxford Economic Papers 48(4), pp.584~600.
- Parker, J., N. Souleles, D. Johnson, and R. McClelland(2013),
"Consumer Spending and the Economic Stimulus Payments of
2008,"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pp.2530~2553.

〔부록〕 부표 및 부도

〈부표 2-1〉 소득분위별 이중차분 분석결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모형 1. 소득	-.044 (.055)	-.084 (.014)	-.029 (.008)	-.022 (.007)	-.038 (.017)
모형 1. 지출	-.015 (.025)	-.101 (.022)	-.088 (.021)	-.130 (.020)	-.082 (.024)
모형 2. 소득	.302 (.051)	.151 (.014)	.072 (.009)	.043 (.007)	.009 (.015)
모형 2. 지출	.154 (.024)	.168 (.021)	.105 (.021)	.121 (.020)	.081 (.024)

주: 이중차분법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와 표준오차(괄호)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부표 2-2〉 전체 가구의 소득과 지출(만 원)

2020년	1~2월	3~4월 (1)	5~6월 (2)	차이 (2)-(1)	전년 대비 이중차분
경상소득	438	403	434	30.3	22.8
근로소득	288	262	259	-3.7	-11.9
사업소득	81	73	79	6.1	1.9
재산소득	4	3	2	-0.9	2.3
공적이전	39	47	73	26.3	30.0
사적이전	26	18	20	2.4	0.4
기초시장소득	373	339	340	1.6	-7.6
총지출	342	297	328	30.6	37.1
소비지출	246	224	245	21.3	33.2
비소비지출	96	73	83	9.3	3.9
이자비용	9	8	9	0.5	0.1
소득-지출	97	106	106	-0.3	-14.3

주: 기초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가계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부표 2-3〉 소득분위별 소득항목 금액 변화

(단위: 만 원/월)

모형 1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소득	-5.14	-23.59	-9.89	-11.12	-3.26
사업소득	-0.95	-0.08	-10.38	-11.10	-24.09
재산소득	-0.86	-0.14	-1.19	0.01	-16.18
공적이전소득	6.80	6.84	6.41	13.29	6.81
사적이전소득	-1.92	0.12	5.65	-0.57	0.84
모형 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소득	-1.63	5.77	-0.90	-11.71	-42.28
사업소득	0.45	-5.25	-0.44	6.31	8.84
재산소득	0.18	0.78	-0.95	1.30	10.13
공적이전소득	20.40	38.71	30.81	26.31	30.77
사적이전소득	-1.04	-1.65	0.32	1.59	-0.78

주: 결과변수로 'ln(소득금액)' 대신 '소득금액'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분석결과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부표 3-1〉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별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의 영향		거리두기 완화 영향		재난지원금의 영향	
	계 수	표준오차	계 수	표준오차	계 수	표준오차
강원	-0.141	0.001	0.055	0.002	0.103	0.002
경기	-0.136	0.002	0.085	0.001	0.073	0.001
경남	-0.182	0.002	0.054	0.002	0.112	0.002
경북	-0.260	0.002	0.098	0.002	0.124	0.001
광주	-0.109	0.007	0.007	0.008	0.125	0.007
대구	-0.402	0.002	0.188	0.002	0.184	0.002
대전	-0.185	0.003	0.092	0.003	0.032	0.003
부산	-0.180	0.003	0.062	0.003	0.136	0.002
서울	-0.159	0.005	0.082	0.005	0.112	0.005
세종	-0.232	0.002	0.066	0.002	0.191	0.002
울산	-0.217	0.002	0.079	0.002	0.107	0.002
인천	-0.163	0.002	0.011	0.002	0.156	0.002
전남	-0.110	0.002	0.029	0.003	0.077	0.002
전북	-0.109	0.002	0.020	0.002	0.080	0.002
제주	-0.206	0.001	0.086	0.001	0.127	0.001
충남	-0.163	0.002	0.058	0.002	0.098	0.002
충북	-0.147	0.002	0.042	0.002	0.103	0.002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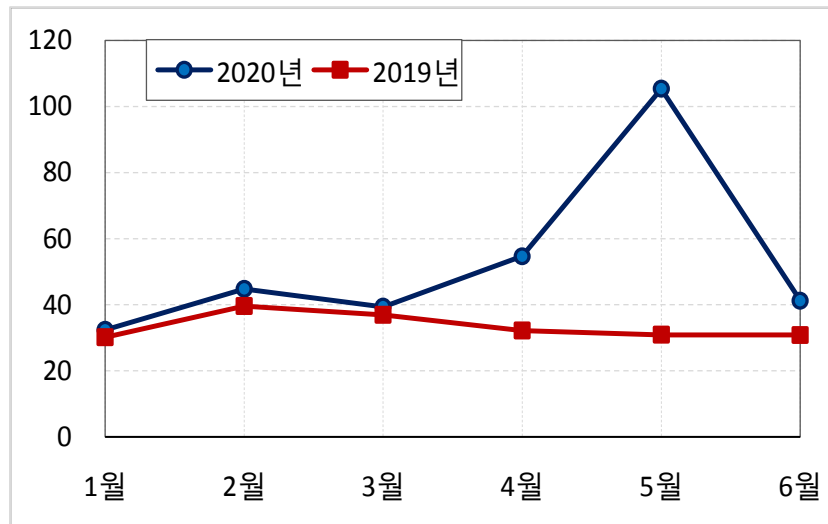
〈부표 3-2〉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코로나의 영향		거리두기완화 영향		재난지원금의 영향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여행	-1.604	0.014	0.017	0.015	0.205	0.007
유아교육	-0.693	0.261	0.429	0.388	-0.376	0.336
학원	-0.592	0.039	0.445	0.027	0.064	0.028
숙박	-0.584	0.003	0.205	0.006	0.159	0.006
유흥	-0.438	0.004	0.194	0.006	-0.162	0.006
패션/잡화	-0.325	0.006	0.151	0.003	0.226	0.004
의복/의류	-0.324	0.005	0.288	0.007	0.215	0.007
교육용품	-0.306	0.052	0.109	0.073	0.201	0.081
스포츠/문화	-0.303	0.001	0.182	0.002	0.081	0.002
백화점	-0.290	0.020	0.244	0.020	0.124	0.018
한식	-0.286	0.002	0.162	0.002	0.112	0.002
미용서비스	-0.275	0.006	0.198	0.006	0.117	0.006
음식점	-0.271	0.002	0.176	0.003	0.097	0.003
서비스	-0.231	0.028	0.017	0.036	0.185	0.036
화장품	-0.229	0.014	0.074	0.016	0.145	0.015
기타요식	-0.225	0.002	0.124	0.002	0.104	0.002
병원	-0.223	0.057	0.009	0.079	0.182	0.083
스포츠문화용품	-0.219	0.004	0.239	0.006	0.193	0.007
주유	-0.184	0.004	-0.151	0.005	0.066	0.004
가전/가구	-0.180	0.012	0.092	0.005	0.184	0.005
자동차용품	-0.107	0.046	0.026	0.056	0.189	0.059
제과커피 등	-0.106	0.001	0.041	0.001	0.095	0.001
기타 의료	-0.084	0.094	-0.065	0.144	0.168	0.154
인테리어	-0.083	0.048	0.041	0.048	0.165	0.047
편의점	-0.075	0.000	-0.017	0.000	0.080	0.000
약국	-0.010	0.039	-0.025	0.048	0.202	0.049
음/식료품	0.011	0.006	-0.001	0.003	0.107	0.003
할인점/마켓	0.034	0.003	-0.015	0.004	0.055	0.004
자동차판매	0.034	0.296	-0.042	0.412	0.338	0.422
기타 유통	0.066	0.017	-0.023	0.022	-0.007	0.014

자료: A카드 사용액 자료.

[부도 2-1] 공적이전 소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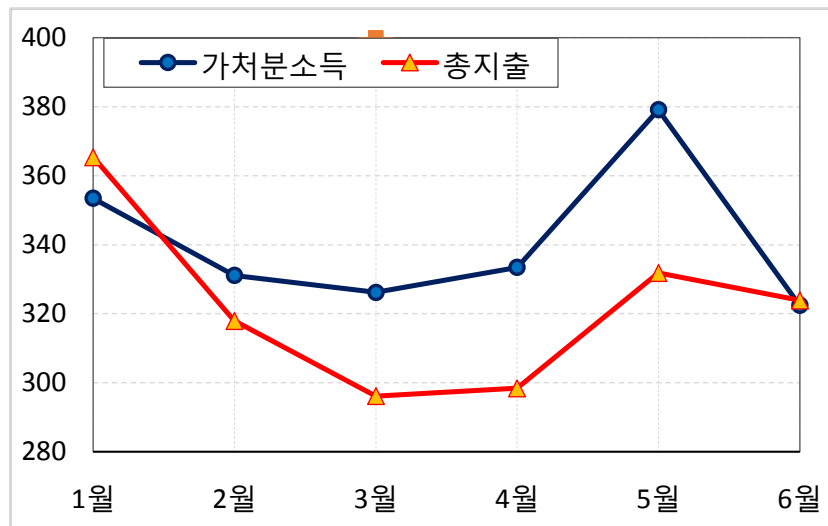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 2020).

[부도 2-2] 2020년 가처분 소득과 총지출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20).

◆ 執筆陣

- 이승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확산과 가계 지출 변화

- | | |
|-----------|--|
| ▪ 발행연월일 | 2020년 12월 24일 인쇄
2020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배 규 식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0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450-8